

UNINOMIC REVIEW

VOL.3 No. 1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 한국의 생존전략

차세대 첨단제조 경쟁력을 위한 한일협력
이지평

한국과 일본의 상생을 위한 협력 전략
이부형

한국의 對중국 경제 의존관계와 향후 전망
최의현

일본의 LNG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윤석상

동아시아 지정학적 현재, 그리고 한-중-일 3국
의 전략적 행보
서승원

한중관계,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임진희

한반도 대전환과 위기, 한국의 길
이재봉

한국과 일본의 공존을 위한 외교전략
박영준

한국과 일본의 독도이야기
곽진오

세 종 연 구 원

UNINOMIC
REVIEW

Vol. 3 No. 1

목차

차세대 첨단제조 경쟁력을 위한 한일협력 이지평
한국과 일본의 상생을 위한 협력 전략 이부형
한국의 對중국 경제 의존관계와 향후 전망 최의현
일본의 LNG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윤석상
동아시아 지정학적 현재,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전략적 행보 서승원
한중관계,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임진희
한반도 대전환과 위기, 한국의 길 이재봉
한국과 일본의 공존을 위한 외교전략 박영준
한국과 일본의 독도이야기 곽진오

차세대 첨단제조 경쟁력을 위한 한일협력

이지평*

1. 세계 통상 환경의 악화와 한일 마찰 문제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통상·기술 마찰과 함께 중국을 포함한 수출 경기가 악화되고 2019년, 2020년 실질GDP 성장률이 2%대를 달성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과의 역사문제, 무역 갈등 문제가 심화 되면서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투자의욕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상식이나 관행이 무너지면서 당분간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세계 경제 및 국제통상 환경이 지속됨으로써 무역입국으로서 성장해 왔던 우리나라의 경우 시련이 아닐 수 없다. 향후의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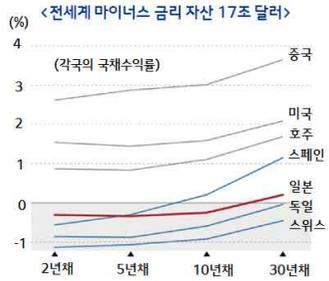
우선, 최근 미국의 대중국 견제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 등 보호주의적인 정책이 확산되는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 최근의 통상마찰 등의 갈등은 자유주의 글로벌화의 위기 국면 진입을 의미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 기저에는 각국 산업 및 기업에서의 자본이익 기회의 감소가 있다.

사실, 최근 자본주의 역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마이너스 금리가 일본, 독일 등에서 장기화 되고 있고 미국도 저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익 기회를 찾지 못한 글로벌 자금의 고속 이동이 경제 불안을 과증시키는 측면도 있다. 여기에는 일본, 독일, 한국 등에 이어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저출산 인구고령화에 직면하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IT 혁명을 통한 생산성 향상 효과나 이

* 現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 석사

것이 잠재성장 능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아직 부진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림 1-1> 각국의 기간별 국제수익률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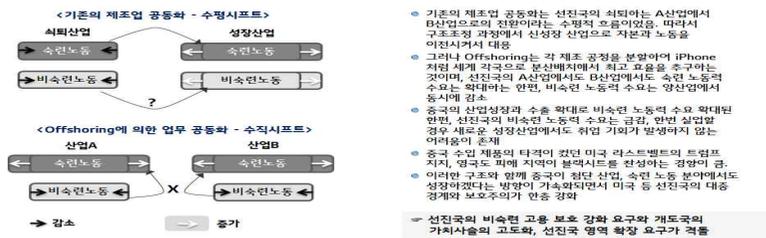


자료: 일본경제신문(2019).

이러한 가운데 세계적으로 소득 및 재산의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까지 일부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외국인 배척 등을 주장하는 강경우파와 함께 급진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을 주장하는 좌파 성향이 동시에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아베 정권의 경우도 강경우파 세력이 한국인을 멸시하는 혐한 사고가 일본 전체 국민들에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양국 갈등이 심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한-일간의 소득격차 축소, 일부 산업의 한일 경쟁력 역전 등이 일본 국민들의 심리에도 미묘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의 글로벌화 과정에서는 신흥국의 추격을 받게 된 선진국의 최퇴 산업의 비숙련 근로자는 새로운 성장산업의 비숙련 분야로 이동해 구조조정 압력을 극복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활발해진 글로벌화, Offshoring을 기초로 한 GVC(Global Value Chain) 구축 과정에서는 업무 기준으로 국제 분업이 이루어져 선진국에서는 성숙산업뿐만 아니라 성장산업에서도 비숙련 업무가 전반적으로 신흥국으로 이전됨으로써 비숙련 실업자가 신성장 산업으로 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선진국에서는 고도 기능을 가진 숙련 분야와 국제 분업이 어려운 청소 등 저임금 서비스업 등에서만 고용이 확대되어 기존 중산층을 뒷받침했던 중간 기술 분야의 고용

<그림 1-2> 글로벌화에 의한 노동시장 구조조정의 양상변화



자료: 이노마타 사토시(2019).

이 줄어들면서 정치적 안정을 뒷받침하는 중산층이 감소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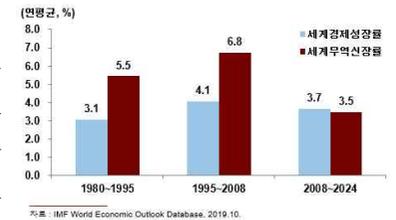
그리고 중국의 높은 성장세와 경제발전과 함께 미국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되고 이러한 경제력의 역전 현상이 점차 정치, 군사적 분야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발생하면서 미·중 양국의 패권 경쟁의식이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비숙련 분야에 이어 '제조 2025'를 통해 첨단 분야까지 개척해 선진국을 능가하겠다고 나섰다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한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 글로벌화 현상은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블록화 등 세계경제의 완전한 분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본은 Slowbalization이며, 글로벌화나 시장원리주의의 조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제의 상호의존관계의 진전으로 인해 미중 경제블록으로의 완전 분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나친 글로벌화나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견제와 함께 각국에서 국내적으로 소득재분배, 약자보호 등의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시장개입과 산업육성책을 통해 기존 범용 중화학공업뿐만 아니라 AI, 로봇, 신재생에너지 등 차세대 산업에서의 스타트업 발전, 일부 첨단 분야에서의 미중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각국에서도 관민협조형 산업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 한일 마찰의 위험성

사실, 지난 7월 4일에 아베정부가 감행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제나 통상을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며,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의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베 정권의 무역보복은 세계경기의 둔화 속에서 한일 경제관계가 수출과 투자 측면에서 부진을 보이는 가운데서 자행되어 더욱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림 1-3> Slow Trade 장기화 전망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9.10.

- 글로벌화와 함께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던 세계 무역 성장률은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정체, 2017년에는 5.7%로 회복했으나 2018년 3.6%, 2019년은 1.1%로 하락전망(IMF, 2019.10)
- 무역분쟁 심화의 배경에는 각국의 포퓰리즘 도약이 있으며, 이는 소득 양극화, 중국 및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작용, 분배 및 기부를 포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시정임.

한일 경제관계는 양국경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및 세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의 악화는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악영향이 적지 않다. 사실, 양국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한일관계가 신속하게 정상화될 것을 바라는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한국의 첨단산업이 일본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산화에도 많은 시일과 재정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사실, 한일 기업간의 분업은 양국 무역이나 투자 통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동남아 등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끼리의 무역 및 투자교류나 한일 기업의 해외 거점과 한국이나 일본간의 무역거래도 활발하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등 각종 전자제품의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일본 기업의 동남아 공장 등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림 1-4> 일본의 對한 무역보복이 글로벌 공급사슬에 미치는 충격구조*

<휴대폰>	<PC>	<서버>
2018년 18억대 출하	2018년 2.6억대 출하	2018년 860억 달러 출하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 관련 산업(소프트웨어 등), 연계 산업(전산업, 관공서 등)이 영향을 받는 구조

<한국의 DRAM>	<한국의 디스플레이>
2018년 한국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72.4%, 생산 차질 발생 시 휴대폰, PC, 서버 등의 생산 차질로 파급되어 막대한 충격 발생	2018년 한국기업의 세계생산능력 점유율 LCD 24%, OLED 90%(DSSC: Display Supply Chain Consultants)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장치 대일 의존도(%)>
 포토레지스트 93.2%, 불화수소 41.9%, 에폭시 수지 87.4%, 인산 95.9%, 실리콘 웨이퍼 52.8%, 포토마스크 74.6%, 마스크 브랜크스 65.5%, 레지스트 도포 장치 98.7%, 드라이브 장치 38%

한일 양국 기업은 제3국을 포함한 글로벌한 차원의 파트너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관계가 손상되는 것은 양국 기업 및 양국의 국익에 중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서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 각 분야의 첨단 신제품

* 토도 야스유키 와세다대학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등과 같은 글로벌 Hub 제품인면서 연쇄 효과를 갖고 있는 제품의 생산차질은 100배 정도의 파급효과가 있으며, 이를 2018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출액 약 1,500달러에 적용할 경우 15조 달러의 충격이 될. 이는 2018년 세계경제의 경상GDP 규모인 85조 달러의 17.6%임. 리먼쇼크로 인해 2009년 세계경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의 성장률이 -0.1%였던 것을 고려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규제 보복은 리먼쇼크의 수십배에 달하는 충격을 세계경제에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청난 위험성을 지니고 있음.

개발이 효율적으로 촉진되고 이렇게 개발된 신제품이 순차적으로 동남아, 중국 등으로 보급되면서 아시아 및 세계경제의 성장 활력이 제고되어 왔다.

따라서 한일 기업간 협력의 순기능이 역사문제로 인해 저해될 경우 아시아 역내 분업이나 세계경제에도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만약 한국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뒷받침하고 있는 전 세계 연간 18억대의 휴대폰, 2억 6,000만 대의 PC 등의 생산이 차질을 빚을 정도로 일본이 규제 조치를 강하게 운영할 경우 거의 모든 산업의 공급사슬에 치명적인 충격이 발생해 한국과 일본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까지 위축되면서 커다란 위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한일 양국의 국익과 기업의 번영을 고려할 경우 현재의 비정상적인 한일 경제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그 후유증은 커질 수 있다. 적어도 역사문제가 경제문제 등을 야기하여 양국의 기업이나 서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3. 일중 협력 강화의 파장

한편, 일본과 중국은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최근의 일중 협력관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들도 많다. 예를 들면 중국 유수의 테크놀로지 기업인 화웨이가 지난 11월 21일에 밝힌 내용인데, 이 기업은 2019년에 일본기업으로 부터의 부품 조달 금액이 전년비로 50% 늘어나 1조 1,000억엔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화웨이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고 미국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사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자료 : 이지평, 中·日 첨단산업 협력 파장 대비해야, 2019.12.9).

또한 일본의 마지막 DRAM 반도체 사업자였던 엘피다메모리를 이끌고 한국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한 바도 있는 저명한 경영자인 사카모토 유키오씨가 중국의 대형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紫光·紫光) 그룹의 수속부사장에 취임했다는 소식이 있다. 이 기업은 NAND 플래시메모리의 양산을 추진해 왔지만 새롭게 DRAM 사업부도 설립한 중국의 국책기업이다. 사카모토씨는 일본에서 반도체 설계자를 100명 정도 모집하여 DRAM의 설계와 함께 이를 양산 라인으로 확실하게 실현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러한 일중 협력은 양국이 지난 2014년 영토문제로 야기된 경제마찰을 극복하고 정부 차원에서의 각종 경제협력과 함께 첨단기술 협력체제가 강화됨으로써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양국정부는 2018년 10월에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을 협의하는 '일중 이노베이션 협력대화'의 창설에 합의하고 2019년 4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의 차세대 규격통일, 수소연료에 관한 규제완화 방향, 스마트시티 개발에서의 데이터 등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 협의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중국의 공업정보성이 베이징에서 자율주행 기술에 관한 포럼을 개최해 양국기술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주력했으며, 여기에는 도요타 등 양국의 자동차 기업이 참가해 서로 첨단기술의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와 같은 일중 첨단산업 협력 강화는 한국의 아성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 등에서 중국의 추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수출 억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장비수출에 계속 주력하고 있다.

중국은 2011년만 해도 스타트업 기업의 자금 조달 금액이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미국을 능가했으며, 정부의 계획과 민간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의 창의를 활용하는 중국의 전략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이 디지털 분야나 신에너지 산업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BYD 등의 중국기업이 이미 1~5위를 독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이노베이션 능력 측면에서 세계 최강으로 도약했다고도 할 수 있어서 미국의 견제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에 대항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의 규제가 심해진 반도체 분야 등에서도 국산화 전략에 매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 산업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중 관계 강화가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의 영향도 겹쳐서 파장이 커질 것인지 우려된다. 그동안 한일 간에서는 제품의 개발과 양산을 위해 협력하고 중국, 동남아 등으로 해당품목의 기술 및 생산 라인을 점차적으로 이전하는 등 글로벌한 차원에서 협력관계가 고도화되어 왔다. 이러한 흐름이 막히게 되고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 배터리, 전기차 등의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에도 중장기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것인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차세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점차 중국으로부터 기술이나 사업을 이전 받아야 할 처지로 전략할 위험을 경계해야 할 것이며, 일제 부품 국산화에 주력하면서도 일본기업과의 기술협력, 차세대 제품 개발 협력의 유지 및 강화가 중요한 시점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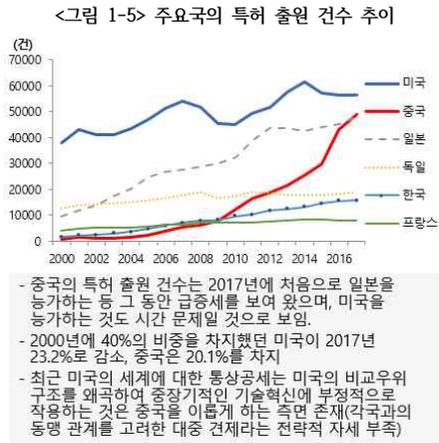
4. 중국의 추격 심화와 한중일 제조업 경합

중국 제조업의 고도화, '제조 2025' 전략은 한국의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의 한일 마찰은 중국 산업의 고도화를 간접적으로 촉진하여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추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제조업이 미중 통상마찰,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 마찰 등의 영향으로 충격을 받는 중국의 한국 산업 추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지평, 한중일 차세대 첨단제조업 경쟁의 전망과 대응, 한국의 논점 2020, 북바이북, 2019.11.25.).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LCD에서 한국을 추월해 이제 차세대 분야인 OLED로 한중 경합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국가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통상공세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반도체 장비를 포함해 국산화에 매진함으로써 그 파장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견제에 주력하는 한편 일본의 무역규제에 맞서서 첨단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정책이 더욱 주력하고 있다. 그 성과가 앞으로 얼마나 확대될 것인지 주목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일본 산업에 미칠 파장도 중장기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중일 3국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면서 AI, IoT, 빅데이터, 로봇,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팩토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신기에 증기기관이 내연기관과 전력으로 변화하면서 주도국이 영국에서 미국 및 독일로 변화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변화로 주도국이나 주도 기업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한중일 3국은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기존 제조업에서의 강점 유지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분야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는 측면이 강해질 것

로 보인다.



자료: WIPO Statistics Database (2018).

특히 중국이 기술력을 높이면서 과거처럼 단순 조립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IT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17년에 처음으로 일본을 능가하는 등 그동안 급증세를 띠었으며, 한국의 3배를 넘어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기술특허의 동향으로 보면 중국

은 디지털통신, 전기통신, 광학, 운영 및 관리 IT수법 등에서 일본, 미국, 독일을 추격해왔으며, 한국도 이들 분야에서 중국과 경합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해 제어기술과 광학기술에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다. 한편, 일본기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20년, 30년 투자하는 경영이 가능해 반도체 노광 장치 소재, 스텔스 폭격기용 도료, 원자력 잠수함 등 전략무기용 고성능 세라믹 부품 소재 등 첨단·군수 산업의 소재 등을 뒷받침하고 있다.

첨단 소재에 필요한 희토류 자원을 통제해 일본기술의 흡수를 유도한 중국 정부에 맞서서 일본정부는 희토류 절약, 대체 자원 소스 개발로 희토류 파동 위기를 극복했으며, 이 첨단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일본은 AI 칩, 양자컴퓨팅, 자율주행, 그린 에너지, 첨단 헬스케어 센서 및 진단 등에 활용되는 첨단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전략이다.

한편, 한국은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7.8조 원의 재정지출을 통해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M&A 지원에 2조 5000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 및 세액공제, 29조 원의 금융지원 및 6조 원의 특별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하기로 했다(한국정부, 100대 핵심전략품목 조기공급안정화대책, 2019.8.5.). 또한 첨단소재 등의 공장입지를 위해 환경 및 노동 규제의 완화도 추진하게 되었다. 이들 정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경우 최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일본제 불화수소의 국산품 대체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차세대 제품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기반을 둔 소재 및 기계 기술이 강화되고 차세대 기술의 보안성이 지역에 기반을 둔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강화될 경우 중국의 추격을 억제하는 데에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일본 무역규제 문제나 미중 기술 마찰에서 부각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의 한중일 경합도 향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미국 반도체 장비의 조달이 어려워져 그 성장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독보적 지위를 강화할 요인이지만 이미 중국이 반도체 제조장치의 자체개발에 주력하면서 관련 기업 육성에 성과를 보이고 있는 한편 일본이나 유럽의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미국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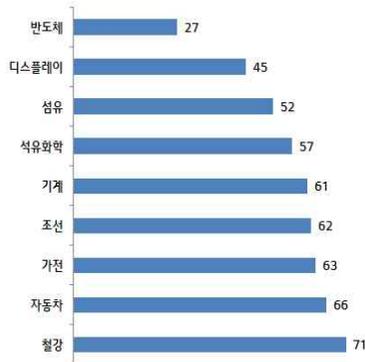
한국기업은 차세대 기술을 계속 개발하는 한편, 중국정부의 국산화 대책에 맞춰 중국으로 부분적인 거점 이전에 나서고 있다. 한국계 기업의 중국거점에서의 기술 및 노하우 보안이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이번 한일 마찰을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주력하면서 소니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CMOS 이미지 센서 등 시스템 반도체에 주력할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 성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5. 한일협력 증진 방안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차세대 첨단제조업에서 한중일 3국이 긴밀하게 분업하면서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추격이 강해지고 한일 관계는 악화되는 한편 일중 관계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우리 산업 및 기업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일본 입장에서도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 산업통상자원부의 제조업현황: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2019」

<그림 1-6> 한국의 업종별 자체 조달비율*



자료: 산업연구원 (2018).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민들의 일
(단위: %) 본 제품 보이콧으로 맥주, 의류, 여행
업계가 타격을 입은 뿐만 아니라 수출
규제가 강화된 세 가지 품목 중 불화수
소를 생산하고 있는 스텔라케미하의 경
우 2019년 3분기 영업이익이 10분의 1
로 감소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본기업으로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가 감소할 경우 차세대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용 소재 및 장비 기술 혁신
에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
실, 지난 1990년대 말의 한국의 외환위

기로 인해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이 현금 거래를 한국 기업에게 요구하자 한국은 네
덜란드의 ASML사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노광
장치 시장에서는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ASML사가 세계
1위로 도약하는 계기로 작용한 바도 있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역사문제를 무역 및 경제 문제와 연결하여 아주 위험한 보복에
나섬으로써 조달선으로서 일본기업의 신뢰도가 국제적으로 떨어진 효과도 있으며, 이
에 대해 한국기업들이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에 매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의 국산화비율은 최근 수년동안 큰 개선이 없었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진행되어 LG디스플레이가 국산 불화수소로 전면 교체하는 데에 선
행적으로 성공하는 등 일부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일 분업의 효율을 무시하고 한국도 모든 것을 국산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은 사실이며,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복원과 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2020년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양국 정부 간의 대화와 협력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양국 정부가 더 이상의 보복을 자제하고 초점이 된 무역 관리 규제상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한 외교적인 타협점을 모색하여 한일경제 협력의 이

점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관계의 악화의 배경을 보면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본으로서는 아시아 각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배상 문제에 대해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재정적으로도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제에서 한국에게 쉽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게다가 한국 산업의 성장에 대한 견제 심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견제 심
리도 깔려 있고, 일본의 우경화, 험한 강경 우파의 정치 및 행정 부문에 대한 영향력
강화도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은 과거와 달리 일본과의 경
제적 격차가 축소되고 민주화도 진행되면서 과거사 문제에서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국민여론이 강해졌다.

한일 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
반이 상당기간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나 시민사회, 학술·학생 교
류 등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간에서 중장기적으로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경제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한일 서플라이 체인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한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한일
양국 기업이 이번에 손상된 기존의 상호 신뢰 관계를 신속하게 복원 및 강화하면서
양국간 분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간
에서 수출입관리 제도에 관한 협의 및 협력과 함께 아시아 역내에서의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관한 한일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시아 역내 및 세계경제에서 개방
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 양국이 협력(RCEP 등)하면서 보호주의 압력을
역제할 필요가 있다.

한일 간의 서플라이 체인을 강화하면서 한일 기업 간의 공동 기술 개발, 연구 협력
을 추진하여 한일 공동으로 개발한 신성장 분야를 아시아 및 세계 제조업에 파급시키
면서 경제활성화에 주력해 왔던 기존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반도체의 차세대 기술인 EUV(극자외선 : Extreme Ultra Violet) 노광장치 신공정,
OLED 신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한일 양국의 잠재력을 결합할 경우 양국기업의 번영뿐만 아니라 양국 경제전반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양국 기업간의 공동 연구, 공동 개발을 활성화시키면서 양국 대학 및 연구소간에서 과학기술 및 연구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의 상생을 위한 협력 전략

이부형*

1. 들어가며

일본은 지난 2012년 말 2차 아베내각 출범 동시에 아베노믹스라는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의 장기불황 탈출과 성장궤도로의 재진입을 꾀함으로써 경기 회복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1% 내외에 불과할 정도의 낮은 성장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1인당 GDP도 3만 달러대에 머물며 정체되는 등 기대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경제도 일본경제의 장기불황 원인이 되었던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주력산업의 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의 부재,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일본형 장기불황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그동안 안정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일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의 해결을 둘러싼 정치, 외교, 군사적 갈등이 경제문제로 전이되면서 상호 경제적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의 위축이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일본은 한국 내 불매 운동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미중 무역분쟁, EU 정세 불안정 등에 따르는 세계 경제의 부진, 4차 산업혁명에 따르는 신기술, 신산업, 신시장의 향방, 아시아 개도국의 성장과 추격 등 극복해야 할

* 現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일본 中央大學 경제학 박사

** 1차 아베내각은 2006년 9월에 시작해 2007년 9월에 해산함.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양국 간 갈등은 굳이 국제법 등을 따지지 않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서로가 갈등을 키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호혜적 경제 실익을 추구해야 할 형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기 저성장이 일본에 미친 영향과 최근 한일 경제협력 관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한일 간 갈등의 조기 해소 가능성 및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을 알아본 후 한일 간 상생을 위한 협력 전략에 대해 논의한다.

2. 장기 저성장이 지속 중인 일본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의 장기불황은 부동산 버블의 붕괴에서 시작되었지만,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일본 정부의 정책 실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불황의 장기화는 물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피해를 불러왔고, 국가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미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성장잠재력 확충에 실패한 것이 일본형 장기불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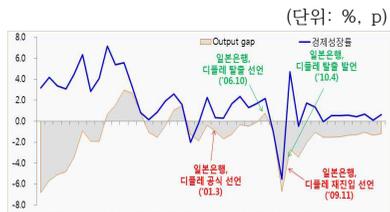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붕괴 전인 1985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의 재무장관이 뉴욕에 있는 플라자호텔에서 엔화 대비 미국 달러화 약세에 합의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일본은 급속한 엔고(엔화 가치 상승)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기 부진에 빠지는 이른바 엔고불황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경기 상황에 대한 오판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금리 인하와 재정지출 확대 등 단기 경기부양책을, 경기 회복기에 금리 인상과 증세 등 선부른 경기 과열 억제책을 반복함으로써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한 채 경제 전반의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물가 하락 현상이 이어지는 장기 디플레이션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이부형 2005, 2019(a))

<그림 2-1> 일본의 택지가격 및 정책 추이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그림 2-2> 일본의 경제성장률과 Output gap*



자료: IMF, 일본은행, 현대경제연구원.

결국, 일본경제는 버블붕괴 후 시작된 저성장이 2018년까지 이어지면서 약 30년간 평균 1% 성장에 그쳤을 뿐 아니라, 2013년부터 이를 타개하겠다고 나선 아베노믹스 추진에도 불구하고 평균 1.2% 성장에 만족해야만 하는 등 '잃어버린 30년'을 경험 중인 것이다. 이처럼 장기 저성장이 일본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우선, 대외적으로는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었으나, 이후 중국에 밀려났다. 1, 2위를 다투던 국가경쟁력도 최근에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났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글로벌 500대 기업이 148개사로 가장 많은 국가였으나, 최근에는 52개사로 급감했다. (IMF, IMD, FORTUNE)

대내적인 피해는 더 심각하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 붕괴로 연평균 15% 이상의 자본손실을 입으면서, 소위 국부라 불리는 국민순자산이 200조엔 이상 축소된 것은 물론이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도 버블붕괴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이나 세금과 같은 정책적 배려를 통해 소득 분배 악화를 억제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같은 소득분배 지표들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다.

국가재정은 경기부양 목적에 더해 소득 격차 확대나 저출산 고령화, 실업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출이 급증하면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훼손되었다.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업, 생활보호, 가족수당 등 각종 복지재정지출이 1990년 5조 엔에서 2017년에는 26조엔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수차례에 걸친 연금과 의료 제도의 개혁을 통해 관련 지출 증가세가 억제되면서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점 정도이다.

이처럼 재정지출(세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세입은 2000년대 들어 버블붕괴 전에 비해 2/3 수준으로 급감하다 보니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한 공채 발행 규모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2010년 이후에는 세입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버블붕괴 전 수준인 60조 엔대로 회복되었지만, 100조 엔대로 확대된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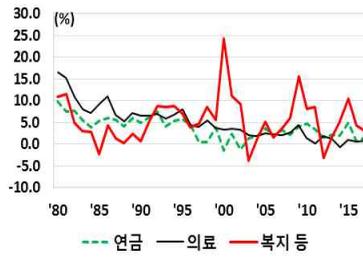
* output gap은 실질 경제성장률과 잠재 경제성장률과의 차이로 플러스일 경우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일국 내 모든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증가율을 말하는데, 해당국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성장잠재력 지표로 활용됨.
** 일본 내각부, 일본은행 등의 자료 바탕.

<그림 2-3>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 추이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그림 2-4> 일본의 사회보장급부비 증감율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해 매년 전체 세출의 30%를 상회하는 공채를 발행했듯이 여전히 대규모 공채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1990년 기준 GDP의 64.3%인 292조 엔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2018년에는 GDP의 237% 수준인 1,300조 엔에 이르게 된 것이다(이상, 이부형 2019(a)).***

<그림 2-5> 일본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이



자료: 일본 재무성.

<그림 2-6> 일본의 국가채무 추이



자료: IMF.

한편, 2020년 일본 도쿄에서는 1964년에 이어 2번째로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다. 1964년 당시에는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후 정치·군사적인 이유에서든 아니든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고도성장한 일본의 모습을 세계 각국에 내보이기 위한 목

* 이외에도 연간 자살자 수가 3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치솟고, 이 가운데 경제 및 생활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1990년대 중반 대비 2010년대 초반에 3배 수준에 달했음. 또, 노숙인이 크게 증가하고, 미혼율이 상승하면서 저출산 현상도 가속되는 등 경기의 장기침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점들을 양산했음. (일본 경찰청,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 미만 소득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모두 그 값이 클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함.

적이 컸었다면, 이번은 아베노믹스로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아베노믹스를 종합평가하자면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소위 무제한 양적완화라 불리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은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시중 통화유동량 팽창,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 상승, 엔화 평가절하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 개선을 유도했고, 이는 다시 주가 상승과 고용시장의 활황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민간자산매입과 도쿄올림픽 준비를 위해 추진한 건축, 토목 사업 등으로 폭락한 부동산 가격을 회복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이 가계로까지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기존 5%였던 소비세를 2014년 4월 8%, 2019년 10월 10%로 2차례 인상하면서 회복 기조에 있던 경제를 재침체시키면서, 버블붕괴 초기에 되풀이된 정책 실기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이부형 2013, 2016(a), 2016(b),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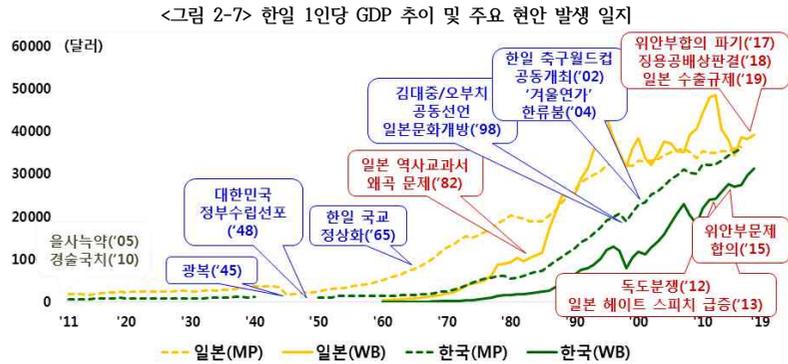
결국, 일본경제는 아베노믹스 추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잠재성장률도 1% 수준에 멈춰서 있는 등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2020년에도 도쿄올림픽 특수를 누려야 할 일본경제가 투자와 소비 등 내수부진에다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도 제한적이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2020년부터 5년간 일본은 잠재성장률에 한참 못 미치는 0.5%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는 IMF의 중기 전망은 더 충격적이다. (みずほ総合研究所, 三菱総合研究所 2019, IMF)

그렇다고 벌써 수년째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인 수출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르는 악영향과 세계적 경기 부진은 모든 국가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를 안겨주는 한국과의 갈등은 일본의 수출뿐 아니라 기업 수익 악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3. 악화되고 있는 한일 경제협력 관계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는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무역, 투자와 같은 경제를 중심으로 착실히 진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980년대 들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양국 간 충돌이 있었지만, 오래 가진 않았고 오히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수상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일본문화 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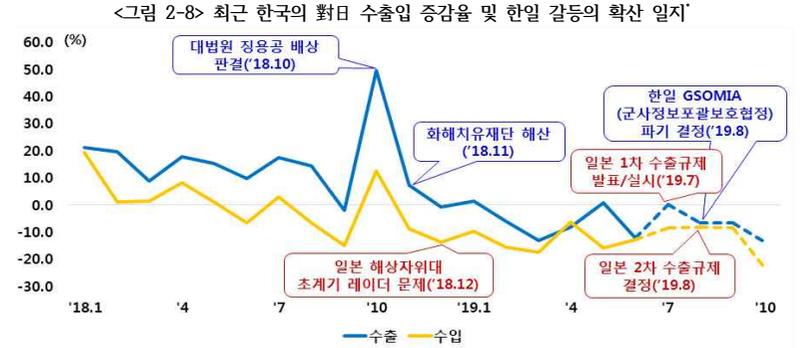


자료: The World Bank, Maddison Project Database(MPD) 2018, 이부형(2019(c))

이후, 2002년 한일 축구월드컵 공동개최, 2004년 겨울연가 NHK 지상파 방송 등으로 일본 내 한류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양국 관계는 그야말로 역대 최고로 양호한 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일본 내 한국인 혐오가 확산되면서 악화되면서 양국 간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된 후 2018년에는 한국 대법원의 정용공배상 판결에 일본이 반발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같은 본격적인 갈등국면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해관계 불일치가 갈등의 원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일본경제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것이 양국 간 갈등의 배경에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물론 1인당 GDP 추이만 보더라도 이

러한 의견이 전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 갈등 양상을 지켜보면 역시 주된 양국 간 갈등의 원인은 과거사를 둘러싼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 문제로 비화되고 이것이 다시 군사·안보문제로 확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료 : 한국무역협회, 이부형(2019(c)).

한일 무역갈등은 이 과정에서 실시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례의 수출규제가 핵심적인 사안이며, 이로 인해 50년 이상 견고하게 진행되던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균열을 불러온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2019년 7월 4일부터 에칭가스(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같이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와 평판디스플레이 생산에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으로 8월에는 소위 캐치올(Catch-all)이라 불리는 규제에 이어졌다. 캐치올 규제는 통상 무기제작이나 개발에 쓰이는 안보 관련 물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 또는 일부 면제하는 조치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한국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러한 특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일단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에서 제외되면 일본에서 관련 상품 수입 절차가 길어 뿐 아니라 수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국내 생산에 큰 차질을 불러올 수 있거니와 이로 인해 특정 산업부문에서는 경쟁력마저 상실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시행되고 있는 일본 수출규제 3품목의 對日 수입 규모는 전체 對日 수입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對日 수입의존도가 낮게는 50% 이상이고 높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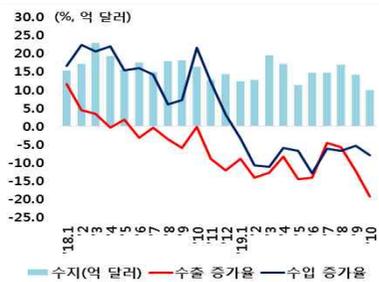
* 점선은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후 실적치.

거의 100%에 달한다는 점과 단기 대체가 곤란하다는 점 때문에 만약 이들 품목에서 수급 차질이 생기면 해당 산업은 물론이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아직 이런 현상이 발생하진 않고 있지만, 지난 6년(2013~2018년) 간 누적기준 對日 수입의존도가 70% 이상인 품목 100여개 중 40개 이상이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화학제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의 경제적 마찰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부형 2019(c))

한편, 일본 입장에서도 양국 간 무역갈등이 바람직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당장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단기 피해 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전반이 자제조달 강화로 선회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도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수지흑자를 안겨주는 3대 수출대상국 중 하나를 잃게 된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4개월 동안 對 한국 무역수지흑자가 2018년 7월~10월까지의 4개월에 비해 46%나 감소했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일본의 對 세계 수출 감소분에서 차지하는 對 한국 수출 감소분 비중도 약 30% 수준에 달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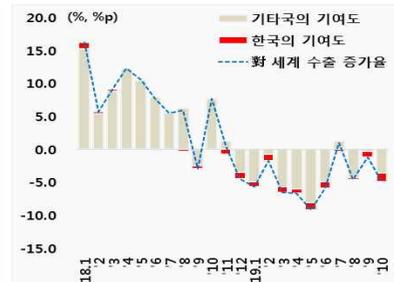
여기에 한국인 일본 방문객 수도 급감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일본 내 지지체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일본 방문객 수는 일본의 수출규제 실시 후 4개월간 98만 명 이상 감소했는데, 특히 럭비월드컵특수가 기대되던 10월에는 한국인 방문객 수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7만 명 이상 감소하면서 전체 일본 방문객 수도 14만 명 이상 감소했다.

<그림 2-9> 일본의 對 한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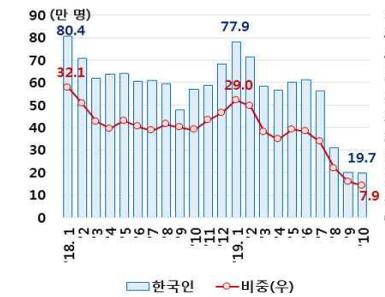
자료: JETRO, 이부형(2019(c)).

<그림 2-10> 일본의 對 세계 수출 증가율과 한국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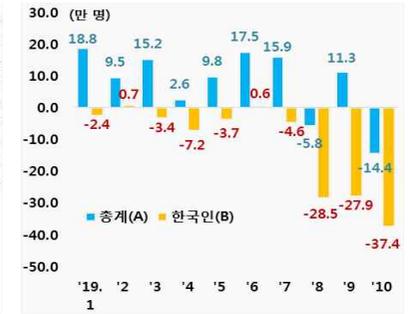
자료: JETRO, 이부형(2019(c)).

<그림 2-11> 한국인 일본 방문객 수 및 비중 추이



자료 : 일본관광국, 이부형(2019(c)).

<그림 2-12> 일본 방문객 수 증감



자료 : 일본관광국, 이부형(2019(c)).

4. 한일 상생을 위한 협력 전략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한일 간에 발생하는 어떤 형태의 경제적 갈등이든 이를 통해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수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 더군다나, 정치·외교와 같은 경제 외적 문제로 발생한 이번 양국 간 경제 갈등은 결과는 비록 짧지만, 즉각적인 상호 피해가 확인된 만큼 정경분리와 상호 호혜성의 추구라는 원리가 반드시 지켜져야 어떤 상황이 닥쳐도 상호 간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이해했으리라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번 갈등이 결코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또,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보듯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세계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 개도국의 빠른 추격,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신산업 경쟁 심화 등과 같은 리스크에 대응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으로부터의 탈출, 고령화 현상 심화와 환경 문제 등의 극복과 같은 공통 이슈에 봉착해 있기도 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일 양국 간에는 과거사문제에 대해 정치·외교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양국 국민정서 차원에서도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해결이 있지 않고서는 언제든 이번과 같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양국이 상생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협력 전략에 합의하고, 합의된 사항을 견지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양국은 경제협력에 있어서 과거와는 달리 일방적인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 대신 상호 호혜적인 교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한 관계 진전을 꾀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일본은 기술이나 자본력 등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일 관계에서 자국의 국익만 최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도 탈일 본화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의 확보와 그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일본과의 경제적 교류를 생각해야 할 때다. 또, 협력 상대국인 일본이 한국은 충분히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그에 따른 협력 전략을 갖출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호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한 중층적인 외교 노력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경분리의 원칙이 견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호 경제적 호혜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를 외교를 포함한 정치와 경제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전자가 아무리 긴장 또는 갈등이 있더라도 후자는 뜨겁게 유지되는 정냉경숙(政冷經熟)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자 모두 차갑게 식으면서 상호 국익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한일이라는 양자 간 관계를 중국을 포함한 3자 간 관계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협력의 안전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 FTA 협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어 시행된다면, 한일 관계는 물론 한중일 및 동북아 전체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한중일 3국의 공통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실천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를 들어 환경이나 에너지, 해양 등 전지구적인 문제 대응,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 및 신산업 등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통해 상호 간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한일 관계, 특히 경제 부문에서의 협력 관계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서, 호혜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제3국 공동진출이나 M&A 등을 이야기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투자 전부를 어느 한 나라가 부담하는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이 동등한 입장에서 자본이든 기술이든 인력이든 공동으로 투자하고, 협력사업의

성과를 이바지한 만큼 상호 나눠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협력형태다. 한국도 이제 일본이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호주 등 타 선진국들과 공동펀드를 조성해서 공동으로 개도국에 진출하는 것을 부럽게만 바라볼 때는 지났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략을 바꿔야 한다.

<참고 문헌>

이부형, '일본형 장기불황, 정부 정책 실패가 원인',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05년.
 이부형, '아베노믹스, 일본경제 살리고 있다',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이부형, '일본경제, 무엇이 달라졌나?',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6(a)
 이부형, '최근 일본경제의 쟁점과 전망',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6(b)
 이부형, '최근 일본경제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7.
 이부형, '일본 사례로 본 저성장의 의미',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9년(a).
 이부형, '포플리즘과 장기침체', 서울국제포럼 발제 자료, 2019년(b).
 이부형, '한일 간 서플라이체인 변화와 대응 전략', "한일 양국 산업의 협력과 경쟁 토론회 - 한일간 서플라이체인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경영자총협회·현대경제연구원, 한국프레스센터 외신 기자클럽, 발제 자료, 2019년(c).
 한국경영자총협회·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 제조업 환경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응 방향 - 한일 간 서플라이체인의 변화를 중심으로', 2019년.
 Ezra F. Vogel, Japan as Number 1 - Lessons for America, New York : Harper Colophon Books, 1980.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각년도.
 日本 厚生労働省, 所得分配調査結果, 각년도.
 日本 厚生労働省, ホームレスの事態に関する全国調査(概数調査), 각년도.
 みずほ総合研究所, 2019・2020年度 内外経済見通し 投資減速と消費の回復力の弱さから日本は低成長が続く, 2019年 12月 9日.
 三菱総合研究所, 2019年7-9月期2次QE後「内外景気見通し」改定値, 2019年 12月 9日.

통계 자료

Bloomberg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www.imf.org

FORTUNE, <https://fortune.com/global500/>

일본 경찰청, www.npa.go.jp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www.ipss.go.jp

일본 내각부, www.cao.go.jp

일본생산성본부, www.jpc-net.jp

일본 재무성, www.mof.go.jp

일본은행, www.boj.or.jp

일본 후생노동성, www.mhlw.go.jp

한국의 對중국 경제 의존관계와 향후 전망

최의현*

1. 들어가며

한국과 중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양자 모두 소기의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였다. 1992년 수교당시 중국은 한국보다 경제규모는 조금 컸지만, 수출은 한국이 더 많이 하는 비슷한 규모의 국가였다. 두 나라의 인구 차이(5천만 명과 13억 명)를 고려하면 잘 사는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였다고도 하겠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과 함께 양국의 경제규모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로 벌어졌다.

한국이 90년대 말의 IMF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난 데 있어서도 중국은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였고, 생산비에서의 경쟁력, 새로운 판매시장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도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 한국 기업의 화두는 중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라는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야 우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 속에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한 질 좋은 중간재와 부품으로 전 세계 시장에 완성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완성할 수 있었고, 한국으로부터 직접적 또는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경제에서 한국의 역할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한국은 달리는 호랑이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 힘껏 불

* 現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동북아경제학회 회장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잡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나라와의 경제관계가 너무 밀접해지면 그 나라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의 사드보복 사건에서 보았듯이 정치적인 이슈와 경제적 이슈를 구분하지 않으며, 인접국가와의 크고 작은 이슈를 '대국'의 관점에서 판단하려 한다. 중국과의 의존관계가 심화될수록 중국 내부의 경제적 리스크와 중국이 만드는 정치적 리스크 등 두 개의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이다.

본고는 한국의 대중국 경제 의존관계를 수출과 투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한중 수교 이후 의존관계가 심화된 원인을 분석한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등 중국과 특수 관계가 있는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 및 투자 의존관계를 분석하여 우리의 문제와 비교해 본다. 이 과정을 통해 향후 대중국 수출과 투자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중 경제 의존관계의 현황과 특징

1) 대중 수출의존 관계의 심화과정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대중국 수출액은 26억 달러,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 중국의 수출국 순위는 6번째였다. 이 당시 미국의 수출비중이 23.6%로 1위, 일본이 15.1%로 2위,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7.7%, 4.2%를 차지했다. 주요 수출품은 철강(열연, 냉연), 섬유, 전자제품 등 중국의 수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중간재나 부품이었다. 1992년의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태의 충격에서 막 벗어나 덩샤오핑이 남순강화를 하면서 재차 개혁개방을 천명하던 시기였다. 미국과 유럽은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이 중국의 개방 정책에 적극 동참했다.

1990년대의 한국경제는 1970~80년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일본으로부터 원부자재와 설비를 도입하여 미국에 완제품을 판매하는 구조이다. 일본과는 구조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이로 인해 미국에 가성비 좋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였다. 1990년대 미국의 수출비중은 꾸준히 20%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표 3-1>에서 나타나듯이 영원할 것 같은 미국 중심의 수출구조는 중국의 등장과 함께 2003년 역전된다. 1992년 6위로 시작한 중국의 수출 순위는 한 단계씩 올라가더니 2003년 드디어 1위에 올랐다. 그리고 2003년 14.5%에 달하던 수출비중은 2010년 처음으로 25%를 넘어섰다. 일국의 수출비중이 마지막으로 25%를 넘었던 해가 1991년의 미국이었으니 수출측면에서는 한국 입장에서 현재의 중국이 과거의 미국을 대체한 것이다.

과거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의 역할과 현재 중국의 역할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국은 미국에 소비재 완제품을 판매했고, 미국은 일본산의 값싼 대체재로 한국산을 선호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무역적자의 해소였고, 그 해결책으로 한국 수출품을 규제하기보다 한국이 미국 제품을 많이 구매하기를 원하였다. 반면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해외수출용 중간재 차원에서 한국산 제품을 원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불만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외적 요인 또는 보복적인 성격으로 한국 수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중국의 막무가내식 무역보복 그리고 무역구조에서 중국의존도의 심화 현상은 한국에게 수출선 다변화라는 숙제를 주었지만, <표 3-1>에서 나타나듯이 2018년 현재까지 중국은 여전히 전체 수출 가운데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이유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에 있다.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였는데 그 이전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국지적인 현상이었다. 앞에서 소개한 일본→한국→미국의 예이다. 그런데 중국이 WTO에 가입하여 관세 혜택을 받게 되자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공급망이 형성되었다. 중국을 완제품 공장으로서 하여 한국과 일본이 중간재와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에서 완성된 제품이 미국과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미국기업이 직접

중국기업에게 제품을 주문하고, 이 기업이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과 일본에서 조달한 후 조립 가공한 제품을 미국에 납품(수출)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수출시장에서 중국을 대체할 지역이 눈에 띄지 않는데다가 침체된 국내 소비가 수출을 대체하기도 버거워 보인다. 현재의 한국은 출산을 저하, 청년 실업을 증가, 노령인구 증가 등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이 산적해 있다. 또한 사회 환경적 요인들이 기업의 혁신을 주저하게 하여 다양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제품을 생산하기도 어렵다.

<표 3-1> 한국의 수출에서 중국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대중 수출액	중국수출비중	중국 순위	미국수출비중	미국 순위
1992	2,654	3.5	6	23.6	1
1995	9,144	7.3	4	19.3	1
1999	13,685	9.5	3	20.5	1
2002	23,754	14.6	2	20.2	1
2003	35,110	18.1	1	17.7	2
2010	116,838	25.1	1	10.7	2
2016	124,433	25.1	1	13.4	2
2017	142,120	24.8	1	12.0	2
2018	162,125	26.8	1	12.0	2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2) 대중 투자의 추이와 특징

대중국 수출 구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해외투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즉 투자에서의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의존도의 절대적 수치는 수출에 비해 그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투자기업이 현지에서 '불모'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본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수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2018년까지 우리나라 해외투자 법인의 35%(27,570개)와 투자금액의 8.8%(686억 달러)가 중국으로 향했다. 법인 수에서는 1위, 투자금액은 미국(14.3%)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 투자금액에 비해 법인 수가 많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이 많았다는 뜻이며, 중국이 한국과 인접하여 비교적 투자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국내

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기업들이 공장을 이전하였다는 의미도 된다.

<표 3-2>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가 얼마나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교직후인 1995년에는 해외투자 기업의 과반이 넘는 55%가 중국에 투자하였다. 하지만 투자금액 면에서는 미국에 비해 낮았다. 소규모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했다는 의미이다. IMF 직후인 2000년에는 전반적인 해외투자가 감소하는 가운데 중국으로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2005년에는 투자기업이나 투자금액에서 미국을 크게 앞섰다. 투자금액의 39.4%, 신고금액의 37.5%가 중국을 대상으로 한 투자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 투자러시는 2010년 이후 상당한 폭으로 위축된다. 중국은 2010년에는 투자금액 면에서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미국(23.2%)에 비해 큰 폭으로 뒤졌다(9.8%). 국내 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을 위해 중국으로 진출할 기업이 대부분 이미 나갔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첨단기술기업을 제외한 전통 제조업분야에서의 외국인투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중국으로의 해외투자가 감소한 반면 미국과 유럽으로의 투자는 증가하였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라 미국과 유럽 모두 수출품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이면서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향이 강해졌고,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역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베트남의 등장이다. 2005년에서 2018년을 비교하면 중국으로의 투자는(투자금액 측면) 39.4%에서 9.6%로 감소했고, 베트남으로의 투자는 4.6%에서 6.4%로 늘어났다. 그런데 투자 건수에서도 같은 기간 중국으로의 투자는 50.1%에서 13.9%로 베트남으로의 투자는 4.3%에서 무려 23.2%로 늘어났다. 과거 중국으로의 투자가 중소기업 위주였는데 현재 베트남으로의 투자 역시 중소기업이 중심이다. 이는 중국내 임금 상승의 효과로 비용측면에서의 경쟁력을 중시하는 투자가 중국대신 베트남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남을 따라하는(herding effect, 군집효과) 식의 투자도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중국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서는 여전이 의문이 크다(WSJ 2019). 베트남을 선택한 한국기업들은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생각하지 소비시장으로는 고려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중국의 장점은 소비시장과 탄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다만, 중국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이 과거와 다르게 향상되어 한국기업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대중 투자 의존도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대중국 리스크는 여전히 전하다. 현지 소비자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한국기업은 중국 정부가 만들어내는 국가이미지에 상당히 민감하다. 최근에 벌어진 사드 보복이 뚜렷한 사례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한국 투자기업에서 중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유출)이다.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의 명시적인 규제이외에 기층 지방정부와 중국 경쟁사의 보이지 않는 방해에도 직면해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사업에 피로감을 느낀 한국기업이 관련 기술을 중국기업에 넘길 유인에 빠질 수도 있고, 중국측 합작파트너가 한국 측 물래 기술을 유출할 가능성도 있다(최의현 2019).

3) 한중간 분쟁 사례

수교이후 얼마간 한중관계의 주도권은 한국이 쥐고 있었지만, 2000년 마늘분쟁을 계기로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세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다. 중국의 경제규모가 커다는 것도 영향을 주었지만, 한국이 순진하게 해당 이슈 한 가지에 집중할 때 중국은 한국에 타격을 줄 모든 전략을 동원하고 실행에 옮겼다.

마늘분쟁은 2000년 6월 한국정부가 중국산 마늘 수입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여론에 기대어 중국산 마늘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한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중국은 일주일 만에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한 잠정 통관 중지 조치라는 무역보복 조치를 내세웠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중국산 마늘 수입은 연간 1천 달러 수준에 불과했지만, 수입 금지된 한국 수출품은 모두 5억 달러를 넘었다. 그런데 중국 마늘 수출의 한국 비중은 10%에 불과했고, 중국의 보복조치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연관 피

<표 3-2> 한국 해외투자의 국별 비중 비교

(단위: %)

연도	국가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1995	중국	55.0	27.7	49.7	25.0
	미국	10.0	17.2	12.1	26.6
	베트남	3.3	6.1	3.2	4.3
	유럽	5.6	19.4	5.4	12.9
2000	중국	36.5	14.7	35.1	16.5
	미국	32.5	27.9	31.3	22.9
	베트남	1.3	1.3	1.9	1.6
	유럽	3.2	5.8	4.2	5.7
2005	중국	50.1	39.4	51.5	37.5
	미국	23.5	17.1	19.6	14.9
	베트남	4.3	4.6	4.6	4.1
	유럽	3.6	9.1	4.1	9.1
2010	중국	29.9	14.4	26.5	12.7
	미국	17.7	13.6	15.5	14.6
	베트남	7.7	3.5	9.3	6.4
	유럽	5.6	24.5	7.4	23.7
2015	중국	22.9	9.8	17.0	10.9
	미국	17.0	23.2	15.8	26.1
	베트남	17.0	5.3	16.6	7.2
	유럽	5.8	11.5	7.2	8.7
2018	중국	13.9	9.6	11.1	9.6
	미국	15.3	21.7	15.2	21.3
	베트남	23.2	6.4	21.3	6.2
	유럽	9.2	23.5	10.6	24.2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

해액은 2.6억 달러로 추산되었다(지만수 2001). 우리가 마늘이라는 수입비중이 아주 낮은 제품에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해야 했나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경제규모와 경제적 영향력이 작았던 2000년도의 중국은 이미 한국보다 몇 수 위의 전략으로 양국 관계를 대했다. 우리 경제의 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역마찰이 발생할 경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었던 사건이었다.

그 다음 사건은 2005년 김치분쟁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검출되었다면서 수입품에 대한 전수 검사를 내세웠다. 이에 중국정부도 한국산 김치에 보복조치를 가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으나, 한국정부가 검사 표본을 10% 수

*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준으로 낮추면서 사태가 진정되었던 일이었다. 중국의 보복이 마늘분쟁처럼 공산품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입장에서 실익이 있지도 않았다.

2011년의 금호타이어 리콜사태는 일개 기업의 문제이지만, 언제든지 중국정부가 한국 투자기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드사태에 따른 한국 산 불매운동의 전조였다. 금호타이어는 1994년 중국에 진출하였고, 당시 이렇다 할 경쟁상대가 없었던 중국 승용차 타이어 시장을 장악, 2008년 시장점유율 1위에 올라섰다. 금호타이어가 한창 잘 나가던 2010년의 중국시장 판매량은 1,200만 개로 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했다. 그러나 2011년 3월 CCTV의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금호타이어가 원가 절감을 위해 자투리 고무를 과다하게 사용했다고 보도하면서 중국 사업은 그것으로 사실상 끝났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자투리 고무의 사용은 제품의 품질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지만, 자투리라는 이미지가 '재생=쓰레기 재활용'의 이미지로 변질되면서 중국 소비자는 금호타이어를 외면하였다. 중국에서의 충격은 한국 본사로 이어져 가뜩이나 좋지 못했던 금호의 경영 상태는 회복 불능상태에 빠지고 결국 2018년 중국계 타이어회사인 더블스타에 인수된다(임지선 2019).

그런데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시장에서 밀려나는 한국기업 가운데에는 금호와 유사한 사례들이 자주 발생했다. 금호의 경우 특정 시장에서 외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시장점유율은 높지만 중국기업들이 꾸준히 기술력을 향상시켜 사실상 기술격차는 크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조그만 외부의 충격에도 외국기업이 쉽게 흔들리는 구조였다. 당시 한국의 중소기업 가운데는 중국 경쟁사의 모함과 투서로 급하게 사업을 접는 사례가 자주 등장하였는데 규모만 다를 뿐 중국업체가 외국기업을 몰아내는 유형은 유사했다.

마지막으로 2016년의 사드보복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비로 미국에서 사드 미사일을 도입하자 중국은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였다. 사드보복의 가장 큰 타격은 롯데가 입었다. 롯데는 한국 정부에게 사드기지를 제공했다

는 이유로 보복을 당했는데 중국 전역의 롯데마트를 비롯한 롯데의 사업체가 대상이었다. 중국정부의 보복은 롯데가 소방법과 위생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무기한 영업정지였다. 결국 롯데는 110개의 마트를 비롯해 그동안 1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던 중국사업을 사실상 접었다. 중국정부 입장에서 롯데의 사업은 중국 내 대체재가 아주 많은 산업에 속해있고, 중국 근로자들도 유사업종에 손쉽게 재취업할 수 있으니 보복에 따른 중국인의 피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다.

사드보복의 또 다른 주요 피해자는 현대자동차이다. 현대의 중국사업은 2014년 시장점유율이 6위에 오를 정도로 승승장구했다. 당시의 판매증가에는 일본차 불매운동에 따른 반사이익이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였다. 현대차의 투자 확대, 일본차의 대열 정비, 중국 로컬브랜드의 저가형 신차 출시라는 시장 환경 속에 사드보복이 터졌다. 2018년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은 9위로 하락했고 급기야 베이징 1공장을 폐쇄하는 결정까지 내리게 되었다. 사드보복이 현 시점에서 현대차의 중국내 판매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촉매 역할과 함께 중국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은 명백하다.

3. 대중국 경제 의존관계의 국제 비교

1) 수출 의존관계 비교

인접국가, 빠른 경제성장, 대외개방 그리고 거대 내수시장까지 중국은 소규모개방경제인 한국의 입장에서 수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수출 의존관계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충격에 취약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방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미국, 일본, 대만 등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해 본다.

먼저 주요국의 수출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비교해 본다. 미국의 경우 2017년

8.4%로 가장 높았고, 2015년 이후 7~8% 정도의 의존도를 보인다. 일본은 2010년 이후 19% 전후의 의존도를 보이는데 과거에 비해 대중 수출 의존도가 소폭 상승하였다. 중국 소비재 시장의 고급화도 있겠지만, 중국 기업들의 자본재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만은 2010년 39.9%를 기록한 이후 20% 후반대로 줄어들었다.

이들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18년 26.8%로 가장 높았고, 2010년 이후 2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다. 일본, 대만과 유사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의존도 자체가 높고, 대만에 비해서는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대만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대중 의존도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중국발 리스크에 우리 경제가 대단히 취약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중국 덕분에 한국이 수출을 많이 하고 경제성장에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중국이라는 대외적 요인에 취약한 수출구조와 경제구조를 갖게 되었다.

<표 3-3> 미국, 일본, 대만과의 수출의존도 비교

(단위: %)

각 국별 수출시장에서의 중국의존도 비교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미국	2.1	4.6	7.2	7.7	8.0	8.4	7.2
일본	6.3	13.5	19.4	17.5	17.7	19.0	19.5
대만	2.8	22.0	39.9	25.4	26.4	28.0	28.8
한국	10.7	21.8	25.1	26.0	25.1	24.8	26.8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각 국별 점유율 비교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미국	9.9	7.4	7.3	9.0	8.7	8.4	7.3
일본	18.4	15.2	12.6	8.9	9.5	9.2	8.5
대만	11.3	11.3	8.3	9.0	9.2	8.7	8.4
한국	10.3	11.6	9.9	10.9	10.4	9.9	9.7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 및 經貿諮詢網**

2) 투자 의존관계 비교

미국기업의 전세계 직접투자 가운데 중국 비중은 2%에 불과할 정도로 높지 않다. 다만 미-중 간의 경제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기업의 대중 투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하

* <http://stat.kita.net/main.screen>
 ** <https://www.trade.gov.tw/>

고 있었다.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비중은 2005년 14.5%를 기록한 이후 점차 감소하여 최근에는 6%대를 보였다. 대만은 여전히 전체 해외투자의 1/3이 중국을 향하고 있지만, 2010년의 83.3%에 비하면 크게 감소하였다. 한국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투자 비중이 감소, 현재는 10% 이하를 기록하였다. 수출에 비해 투자의 대중국 의존도는 한국, 일본, 대만 모두 높지 않았다. 이는 중국이 외국인투자를 선별해서 도입하는 정책을 사용하는 한편, 외국기업들도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어려움으로 신규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이다.

투자 규모면에서 대중국 투자 리스크는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투자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현지화 과정을 통해 본국과의 협력관계를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중국의존도가 높으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2017년 현대와 롯데에 대한 보복에서 보듯이 한국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우리 투자기업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좀 더 암묵적이고 조직적으로 중국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한국기업을 선별하여 불공정 정책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표 3-4> 주요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 비교

(단위: %)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미국	0.8	0.8	1.6	1.7	1.7	1.8	2.0
일본	3.0	14.5	12.7	7.2	5.3	6.4	6.8
대만	33.9	71.1	83.8	50.1	44.4	44.4	37.3
한국	14.7	39.4	14.4	9.8	8.7	7.7	9.6

자료: US Department of Commerce(BEA), Jetro, 대만 경제부투자심의위원회 한국 수출입은행

4. 결론: 한국의 전략적 선택

특정 국가와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의존적일 경우 대외 취약성은 커지게 된다. 중

* 투자금액 기준
 ** 2001년 삼불정책 폐기의 영향으로 2000년대 초반 대중 투자 급증
 *** <https://www.bea.gov/international/di1usdbal>
<https://www.jetro.go.jp/en/reports/statistics.html>
<https://www.moeaic.gov.tw/english/index.jsp>
<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

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는 심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것이 우리나라가 90년대 말의 IMF 위기와 2000년대 말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상대적으로 차원에서 줄일 것을 요구한다. 우선은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고, 그 다음은 중국이 의도하지 않은 경제위기에 처했을 경우 우리 경제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선택은 중국과 함께 또 다른 지역에 대한 고려이다(China plus one). 물론 이러한 지적은 과거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적되는 이야기이고, 버클리대학의 아이켄그린 교수가 지적하였듯이 한국의 산업구조상 쉽게 바꿀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2019년 12월 21일자 조선일보 인터뷰). 게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못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관계가 더 심화 될 수 있다. 새로운 비용이 들어가는 신시장 개척보다 안전한 기존의 거래처에 더 의존하기 때문이다. 수출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상위 5개 품목이 67.2%, 상위 10개 품목이 85.2%로 소수 제품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고, 이들 대부분은 중간재로 역시 중국, 미국, 일본 등 소수의 국가에 수출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상 수출 다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늘어나는 수출에서의 중국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정도는 가능할 것이며 이는 생산 제품과 기업의 다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투자 측면에서 중국의 역할은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베트남으로의 투자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투자 인프라와 내수시장의 규모 측면에서 베트남이 중국의 대안으로 자리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의 건당 투자금액은 2.8백만 달러로 중국의 30%에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유럽(동유럽 포함), 동남아, 인도 등으로의 투자다변화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어 중국의 비중은 좀 더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발 리스크를 회피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동시에 중국정부가 의도적으로 리스크를 발생시킬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특정국에 대한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경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지양해야 하며, 특히 중국은 정치구조가 다르고 지정학적으로 갈등 요인이 잠복해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그동안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심화 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이기에 장기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중 투자의존도는 과거에 비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 이는 중국에서 발생할 리스크에서의 충격을 줄여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한국기업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대운, 정준영. 2018. 「최근 중국의 무역구조 변화 특징 및 전망」. 『국제경제리뷰』, 2018-25. 한국은행

남수중. 2016. 「“Riding the Tiger(騎虎難下)”: 한-중 경제관계의 평가와 전망」. 『CSF 중국전문가포럼』, 2016.12.09.

(<https://csf.kiep.go.kr/expertColr/M004000000/view.do?articleId=20851>)

도현철, 권기영. 2017. 「우리나라 대중국 투자 현황과 신창타이 시대 우리의 대응방안」. 『Issue Report』, 2017-FDI-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박가영. 2017. 「한-중 가공무역의 구조분석과 시사점」. 『KIET 산업경제』, 2017-08.

임지선. 2019. 「금호타이어, 왜 벼랑 끝에 몰렸나」. 『주간경향』, 1358호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04021519131&code=114>)

정귀임, 이진형. 2018. 「우리나라 수출시장 다변화 비교분석 및 시사점」. 『IIT TRADE FOCUS』, 2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지만수. 2001.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LG 주간경제』, 2001.05.23.

최의현.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가? 네거티브 리스트의 발표와 의미」. 『CSF 중국전문가 포럼』, 2019.01.30.

(<http://csf.kiep.go.kr/expertColr/M004000000/view.do?articleId=32895>)

현대경제연구원. 2016. 「중국의 대한국 보호무역 현황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6-28.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중 수출 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대세계 시장을 중심으로」. 『Weekly Economic Review』, 18-33.

Wall Street Journal. Manufacturers Want to Quit China for Vietnam. They're Finding It Impossible. 2019.08.21.

(<https://www.wsj.com/articles/for-manufacturers-in-china-breaking-up-is-hard-to-do-11566397989>)

일본의 LNG 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윤석상*

1. 들어가며

에너지자원의 다양화와 안정적인 공급은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의제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한 가지며, 지구온난화의 대응을 위해 깨끗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 실현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자원의 대외의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특히 석유 자원의 경우 중동지역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상 큰 약점이 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다각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를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에너지자원 정책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에서 에너지자원 시장을 개척하고 거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주요 에너지자원으로 LNG(Liquefied Natural Gas) 시장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2016년 5월 유동성이 높은 LNG 시장을 재편하고 일본을 LNG 거래의 중심지(LNG 허브)로 육성하려는 'LNG 시장전략'을 책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 일본은 LNG 시장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유지하고,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하류개발과 관련한 LN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인도와 연계한 범아시아 LNG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에 LNG 관련 분야를

* 現 한국외국어대학교 융합일본지역학과 특임강의교수
오사카대학 법학 박사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일본 정부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LNG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므로서 ASEAN 지역의 LNG 인프라 구축과 LNG 시장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에 본 글에서는 일본의 LNG 시장전략과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협력 가능성과 협력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정학적 이해, 중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일협력

일본의 LNG 정책은 우선적으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확보 문제는 기본적으로 가스 소비국들 간의 경쟁구도이면서 정합게임의 성격을 지니는데,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에너지 개발 및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스관 사업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 한국의 경합과 이에 더해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에너지 수출 전략이 서로 얽혀 있다. 특히, 중국의 천연가스 도입을 위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는 미·일 동맹에 기초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신냉전'이라고 불릴만하다.

세계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에 세계 최대 가스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2024년까지 전 세계 가스 수요의 4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 점은 중국의 구매력이 에너지 패권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와의 첫 파이프라인가스(PNG)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Power of Siberia: POS 1)'를 2019년 12월 2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하는 등 세계 최대 천연가스 부국과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 손을 맞잡으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중앙일본, 2019)

이러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지형의 변화는 일본과 미국에 있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셰일 가스 등 에너지 수출전략을 통해 국가 수입의 60%를 에너지 수출에 의존하는 러시아의 경제력에 타격을 주고 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에너지 전략과 배치된다(김성훈, 2013). LNG 수출 증대를 통해 에너지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미국의 전략과도 상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LNG 개발 및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LNG를 중국 등과의 무역적자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가스협력에 따른 POS 1과 현재 건설계획을 세운 POS 2가 가동되면 중국 북부지역은 러시아 PNG만으로도 천연가스 수요를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진입이 사실상 어려워진다(중앙일본, 2012).

이러한 상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패권을 둘러싸고 중·러 협력에 대응하는 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일의 공조는 인도-태평양지역을 단위로 하여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한 국제질서 구축에 나서겠다는 '인도·태평양전략'에 기반하고 있는데, 중국을 현상변경 세력이자 역내 국가들의 사활적 이익에 대한 최대 장기적 위협 세력(greatest long-term threat)으로 인식하고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이다(economic security is national security)"라는 명제 하 2017년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JUSEP)'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손열, 2019).

<표 4-1> 2017년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합의문

개요	미일 양국은 미일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JUSEP)'을 미일경제대화의 틀 안에서 진행하기로 한다.
주요 원칙	개발적이고 경쟁적인 에너지 시장은 안정된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하다. 빈곤 박멸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글로벌 안정보장 증진을 위해서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의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다.
활동계획 우선순위	보다 안전하고 핵확산저항성이 높은 선진적인 원자력기술 촉진. 고효율·저배출 석탄기술 전개. 천연가스 글로벌 시장 전개.
주요 거점 지역	개발도상지역 지역통합을 촉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개발: 좋은 통치, 이해 관계자의 이익 존중, 자금조달의 투명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접근 확대 등 원칙 준수.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자료: 経産省*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JUSEP)'의 목적은 미국과 일본이 LNG 공급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상호협력하고 PNG 공급 확대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제3회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2019년 2월 28일)에서 양국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인도·태평양 지역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너지 접근성 개선을 위해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LNG 분야 개발 및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하였다(JUSEP Media Note, 2019). 또한 선언문은 2019년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포럼'에서 양국이 서명하여 재확인하였다. 이 서명에서 주목되는 것은 LNG시장 확대를 위해 관민 협조에 기반한 자

* <https://www.meti.go.jp/press/2017/11/20171107002/20171107002-1.pdf>(검색일: 2019.12.10)

금지원과 인재를 육성하고,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원칙' 등의 국제 기준에 입각하여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서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명시하였고, '제5회 미-일 전략 에너지 파트너십' 회의를 제3국인 태국 방콕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經濟産業省, 2019). 태국에서의 회의 개최는 미-일 양국뿐만 아니라 ASEAN 국가 및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다양한 군사적·상업적인 역할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구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3. 일본의 LNG 시장 상황과 LNG 전략

중국이 에너지 패권의 '게임체인저'로서의 성장과 이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대응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국가들(미국, 일본, 호주, 인도)을 중심으로 설정된 규칙과 규범의 네트워크에 중국을 배제하여 길들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손열 2019). 이와 같은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일본은 지경학적 측면에서 에너지·자원 전략을 수정하여, 경제적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에너지자원 정책은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및 협력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안정적인 수급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자원 정책이 LNG 부분을 중심으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 이유로 세계 LNG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본의 국내 LNG 소비량 및 국제 LNG 수요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그림 4-1, 4-2> 참조).

<그림 4-1> 세계·아시아 지역 LNG 수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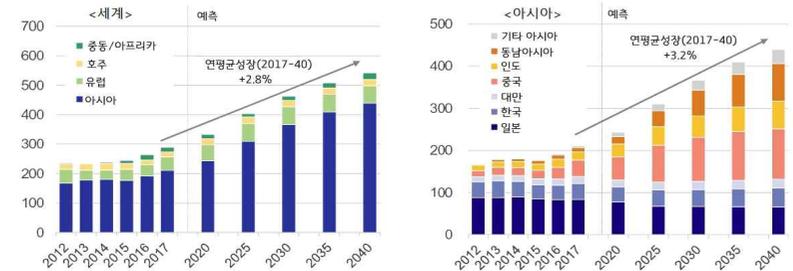


자료: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9)

일본의 LNG 소비량 감소 요인은 원전 재가동에 따른 발전용 수요의 감소,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스 소비 감소,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절약 생활화로 인해 전력수요가 원전 사고 이전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림 4-2> 세계 LNG 수요 추이(국가·지역별)



자료: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9)

그러나 일본의 LNG 소비 감소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세계 LNG 시장의 성장과 확대에 발맞춰 적극적인 역할을 취하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규 LNG 수요국들이 장기계약이 아닌 거래의 다각화를 통해 LNG를 조달하려는 등 LNG 시장이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의 재편 되고 있는 점, 둘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LNG 공급 확대를 위해 미국과 호주 등에서 LNG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 LNG 조달의 불륨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일본의 전력·가스 소매시장 자유화에 따라 전력·가스회사들이 장기계약에 따른 가격 리스크를 회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LNG 수요가 결국에는 중국과 아시아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세계 LNG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존재감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9).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2016년 일본을 LNG 시장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LNG시장 전략'을 책정하였고, 구체적으로 <표 4-2>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중점 실행분야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부는 2018년 11월 '종합자원에너지 조사회 자원·연료분과회'에서 기존의 LNG의 안정적인 조달과 상류부문개발에 더해 '제3국에서의 비즈니스 전개'를 핵심으로 하는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표4-3>참조). 특히, 2018년 10월 'LNG산소회의 2018(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 2018)'에서 일본은 LNG프로젝트와 관련된 파이낸스 지원과 수요국의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표 4-2> LNG 시장 육성을 위한 중점 실행분야 및 방안

<p>▷거래 용이성 향상 계약에 의한 판매제한(목적지제한조항) 완화, 철폐 정부: 세계 주요 수요국(일본, 한국, 유럽, 중국, 인도)과 연계해서 완화-철폐 민간: 목적지제한조항 완화-철폐를 위한 교섭</p> <p>원할한 프로젝트 추진과 시장육성에 필요한 공적 파이낸스 검토 정부: LNG시장 육성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는 공적 금융기관의 파이낸스 지원 적극 검토</p> <p>가스 및 LNG 수요 확대에 의한 'LNG시장'의 다양성 확대 정부: 국내 연료전지 도입, LNG 병커링 촉진, 해외 가스시장 발전을 위한 아시아 주요국과 협력 민간: 적극적인 가스 수요확대를 위한 판촉강화, 해외 가스사업 추진</p> <p>LNG 신속한 항만처리 정부: LNG선 항만 접안 심사 신속화 민간: LNG선, LNG관련설비 표준화 추진</p>
<p>▷수급을 반영한 가격지표 일본의 LNG 수급을 반영한 가격지표 실현 정부: • 동경상품거래소에 의한 매칭 및 가격발신 기능 강화 지원 • 일본의 수급을 반영한 가격지표 활용·경쟁촉진 민간: 가격지표 신뢰성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제공-LNG가격 지표 거래에 활용</p>
<p>▷개방적이고 충분한 인프라 정비 제3자가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LNG기지·지하저장소·광역파이프라인 용량 확대 정부: • 기존 LNG기지에 제3자 사용 실현 • 개방적인 LNG기지, 광역 파이프 라인, 지하저장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하고 확실히 정비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 및 제도 시스템 검토 민간: 시장 육성에 우선한 인프라 운영과 거래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추진</p>

자료: 經濟産業省(2016: 필자 정리)

파이낸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MEC)가 일본기업의 천연가스 액화 프로젝트에도 지원을 가능하게 하며, 일본무역보험(NEXI), 국제개발은행(JBIC)의 경우도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에서의 LNG프로젝트와 LNG 도입기지 프로젝트도 지원할 것임을 제시하였다(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2019).

이러한 일본정부의 정책방침은 에너지·자원 개발분야에서 타깃(Target)이 되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단계, 일본기업의 진출 정도와 수주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국가이익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재흥전략'의 액션플랜인 '국제전개전략'의 구체적인 실행을 의미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국제전개전략'의 타깃이 되는 지역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5년 '인프라 파트너십'을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DB), JICA 등과 연계한 자금지원과 기술협력 등의 제공에 합의하였다(外務省, 2015).

이처럼 일본의 LNG 전략은 '국제전개전략'의 실질적인 실행으로 LNG 수요가 증가

<표 4-3> 일본의 LNG 정책 전개

	스테이지 I (1969 ~ 1988년) LNG수입	스테이지 II(1989 ~ 2017년) LNG수입+상류권익참가	스테이지 III(2018 ~) LNG수입+상류권익참가 +제3국 비즈니스 전개
정책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대체 에너지로 천연가스 도입·이용촉진(73, 79년 석유위기) • LNG안정적인 수입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가스 도입·이용촉진 • 상류권익 참여에 따른 수입 장기안정화,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수요 급증, 일본 수입감소, 안정적인 조달확보와 함께, 제3국 LNG 사업 추진을 통해 일본의 LNG 시장영향력 유지 • 일본 LNG관련 기술을 제3국에 전개, 상류~하류까지 공급체인 전체걸친 수요자 비즈니스 전개 지원
대표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 대체 에너지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80년): 안정적 공급 확보, 액화기지 : LNG탱크·수입기지 정비, 수요 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G 21계획('90년): 도시가스 사업자 나프타·부탄가스 공급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 촉진 • 석유공단법개정('94년): 가스/LNG 개발·생산에 출자 가능 • JOGMEC법 개정('12년): 가스/LNG개발·생산에 산출출자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NG소비회의에서 발표한 패키지('18년): JOGMEC 상류개발이 아닌 일본기업의 액화 프로젝트에 지원가능, NEXI/JBIC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에서의 LNG프로젝트, LNG수입기지 프로젝트에 우대조건 지원가능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9년~알래스카LNG 수입개시 • 1972년~브루나이LNG 수입개시 • 1977년~UAE, 인도네시아LNG 수입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9년~서호주지역LNG수입 개시(미쓰이·미쓰비시 상류개발) • 1996년~카타르LNG 수입개시(마루베니·미쓰이 상류개발) • 2006년~호주다윈지역LNG 수입개시(INPEX, 동경가스, 동경전략 상류개발) • 2009년~러시아 사할린 II LNG 수입개시(미쓰이·미쓰비시 상류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장기계약으로 미국 세일가스 도입시작, 장기적으로 유럽 등에 판매(販売)계획, 연 1500만 톤 도입 • 2018년~INPEX 일본기업 최초로 오퍼레이터로 호주 Ichthys LNG 출자 개시 ⇒ 목표: 2030년 일본기업이 상당량 취급, 일본의 가스·전력 회사 해외에서 가스 관련 비즈니스 전개

자료: 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2019)

하고 있는 동아시아지역을 타깃으로 하여 중·하류부문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일본의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키며, 이를 통해 일본이 세계 LNG 시장의 주도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4. 동아시아 LNG 수요창출과 시장 주도권 확보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의 LNG 전략은 LNG 시장의 확대와 이에 요구되는 LNG 인프라 정비 및 LNG 관련 비즈니스 전개를 통하여 일본의 이익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다. 이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일본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는 점이다. 일본은 70년대부터 원유수급의 안정성과 일본산 수출입 물품의 해상교통로(Sea Lane)를 확보하기 위해 이 지역의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80년대부터 미국과의 경제마찰, 90년대 미일관계의 상대화와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 확대, 자유무역 협정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국제분업 체제' 구축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중국의 對ASEAN 외교공세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ASEAN을 중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동남아시아 중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즉, 국가전략 차원에서 이 지역의 LNG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 신규 LNG 소비를 창출시킴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며, 중·하류부문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는 1972년 LNG 생산을 시작한 브루나이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LNG 수출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일본이 수입하는 LNG의 25.5% 정도(2017년 기준)가 이들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운송거리가 짧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일본의 천연가스 조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태국이 LNG 수입을 시작한 이래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통적인 LNG 수출국들이 LNG 도입기지 건설 및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LNG를 수입하는 이유로는 LNG 개발 특성상 장기계약에 따른 공급의무를 들 수 있다. 즉, 장기계약에 의한 상류부문 개발은 생산된 가스의 목적지제한조항으로 인해 국내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생산국들이라도 계속 늘어나는 국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永井一聡 2016, 51~52).

그러나 현재 동남아시아의 LNG 수급상황과 시장 확대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이 상류부문개발을 하던, 해외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던 간에 공급량 확대가 아니라 공급량 확대의 필수조건인 LNG 도입기지 등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특히, 탐광과 개

발을 통해 가스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이 지역은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인 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도서국가들이라는 점에서 PNG(Pipe Natural Gas)방식보다 LNG방식이 선호되며 LNG 도입기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LNG 액화기지

〈표 4-4〉 일본의 기업의 동남아시아 LNG 중·하류개발 및 가스사업 진출 현황

국가	투자 기업	사업내용
인도네시아	오사카 가스	• 천연가스 공급 마케팅 사업(2018년): PT OSAKA GAS INDONESIA 설립,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가스공사 페르타미나(Pertamina)와 천연가스 공동 마케팅 사업 시행
	시즈오카 가스	• 가스에너지 사업 참여(2017년): 인도네시아 가스에너지 사업체 MEP의 주식 일부 인수, 남수마트라 주(州)를 중심으로 산업용 가스 판매
	동경 가스	• 동부 도서지역 가스공급계획(2018년): (경제산업성 예산)가스수요 파악, 가스 공급계획 검토 • 가스공급회사 투자(2017년): 일본정책투자은행(DB)와의 합작회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가스공급회사 Panji Raya Aramind주식 취득(33%)
	마루베니 소지츠	• LNG 도입기지, 가스발전소 건설(2017년): 자바섬 서부에 인도네시아 최초 가스화력 IPP발전소 건설, LNG 도입시설(FSRU) 건설 및 조업 프로젝트 실시
말레이시아	동경가스	• LNG조달·도입기지 건설(1992년): 말레이시아 국영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최대 도시가스 운영회사 설립 • 산업용 에너지 서비스 사업(2014년): 가스말레이시아와 공동출자 회사 설립, 가스 코제너레이션 관련 노하우 제공, 가스말레이시아 가스공급 인프라 활용.
태국	오사카가스	• 산업용 에너지 서비스 사업(2015년): 오사카 가스 태국법인 설립, 산업용 연료전환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위해 태국 PTT사와 공동출자 회사설립, 일본계 기업 이외에 에너지서비스 사업 확대
	동경가스	• 가스공급회사 출자(2018년): 미쓰이물산과 자회사 동경가스아시아가 공동출자한 MITG를 통해 태국가스공급회사 GWHAMT의 주식 30% 취득
	JERA	• LNG조달·도입기지·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협력강화 OU체결(2015년)
베트남	동경가스	• LNG조달·도입기지 건설(2016년): 베트남 최초 LNG조달·판매 및 도입기지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합병회사 설립 • 가스 공급사업 진출(2017년): 베트남 PetroVietnam저압가스판매(주) 주식 일부 취득
	마루베니	• LNG도입기지·화력발전소 건설 타당성 조사(2018년): 국영 전력회사 EVN과 베트남 남부에 LNG 도입기지와 가스화력발전소 건설관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실시
싱가포르	오사카가스	• 산업용시장 천연가스 판매사업(2013년): 오사카가스 싱가포르 법인, 싱가포르 가스판매기업 CITY GAS와 합작회사 설립
방글라데시	미쓰비시상사	• LNG도입기지 건설(2018년): Summit LNG Terminal사의 주식 25% 취득, FSRU 사업 참여
파키스탄	미쓰이물산	• LNG 도입기지 건설(2017년): BW Gas Limited사 주식 49% 취득, FSRU 사업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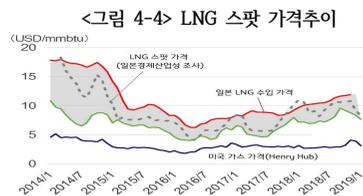
자료: エネルギー庁 (2019)

및 도입기지과 관련된 중·하류부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저비용의 부체식 LNG저장 재가스화시설(FSRU)이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동남아시아의 상황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LNG 구매자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개발협력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일본은 구매자로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FSRU를 중심으로 LNG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LNG 공급 및 판매, 시설운영과 마케팅 분야 등 제반 분야에 걸쳐 일본의 경험과 기술을 제공하는 신규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동남아시아 지역 LNG관련 투자는 인프라 투자 이상의 경제적 목적이 있다. 즉, LNG 수급조절을 통한 볼륨 리스크 해소를 위해 중·하류부분 진출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설정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일본은 인구 감소와 원전 재가동 및 재생에너지 등으로 자국 내 LNG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전력·가스소매시장 자유화에 따라 LNG수요 전망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LNG 도입의 수급조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류부분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LNG확보 전략을 추진하고, 동시에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입 LNG의 재수출'을 통한 안정적인 소비시장의 확보가 필요하다. 원전재가동, 인구감소, 전력·가스소매시장 자유화로 인해 국내 LNG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이상, 해외 소비시장이 필요하며, 이를 활용해 볼륨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신규 LNG 프로젝트의 경우 거래조건에 적용되고 있는 목적지 제한 조항을 철폐하고 국내 LNG수요의 불확실성을 해외 시장 창출로 상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저렴한 미국산 가스를 수입해 재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LNG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LNG 인프라 정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자료: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9)

그러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LNG 거래의 자유화가 필요하다. 현재 신규 LNG 수입국들은 지역별 LNG가격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시장에 수입을 의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고자 도입방식을 LNG 카고 단위의 스팟(Spot)거래 및 포트폴리오 계약, 재수출 카고 거래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다(에너지경제연구소 16-18호, 23). 그러나 세계 LNG가스 가격 추이를 보면(<그림 3>,<그림 4>참조), 일본의 LNG 가격이 높기 때문에 수입 LNG의 재수출 및 포트폴리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다. 즉, 국제 LNG 공급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LNG 현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LNG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유가에 연동된 장기계약에 의한 수입이 중심인 일본의 경우 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에너지 경제연구소 19-30호, 35).

따라서 일본정부는 장기계약에 따른 손해를 상쇄하고 거래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적지제한조항의 완화·철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제3국 간 거래 활성화와 제3국에서의 LNG 관련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본정부는 2012년부터 관민합동으로 'LNG산소회의(LNG Producer-Consumer Conference)'를 매년 개최하여, LNG 시장의 확대 및 자유화, 그리고 제도개선을 위한 여론형성과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점은 다자주의적 제도를 활용해 관민합동으로 직접대화를 통해 협력을 촉진하려는 일본적 특징을 LNG분야에서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5.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필요성, LNG 시장 확대 공동모색

현재 일본의 LNG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 전략(FOIP)'의 지정학적 관점에 기반 하면서 경제적 실익 추구로 규정할 수 있다. 즉, 중국의 확대 되는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해양안보를 중심으로 해양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역내 국가들과 개발·무역·투자 등의 협력을 통한 연계성(connectivity)을 증진시키며, 비전통적 안보 협력을 추구(손열 2019, 2)하는 선상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LNG 전략은 한국의 LNG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우선 지정학적 이해에 근거한 정책 추진은 상대방 국가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과 미·일 공조에 근거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LNG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발을 초래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ASEAN 중심성과 포용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협력을 촉진할 것인가가 핵심과제이다. ASEAN 중심성이 강대국 틈새에서도 아센안의 정체성을 지키며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포용성은 중국을 배제하거나 중국과 대립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한겨레 2019.11.27.). 따라서 ASEAN에 대한 지난 친 관여와 중국과의 대립을 상정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ASEAN 국가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태평양 협력은 자유롭고,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포괄적(free, open, inclusive and comprehensive)이어야 하고, 모든 역내 국가들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동시에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의 신념(joint commitment)에 기반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응은 역내 지역협력 구도가 미·중 강대국 간 경쟁구도로 빠져들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견제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배금찬 2018). 따라서 지정학적 이해에 근거한 정책 추진은 ASEAN 국가들이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LNG 전략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우리나라의 LNG전략 구축과 실행에 있어서의 정책 참조와 함께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정책 참조의 경우, 일본의 LNG 관련 중·하류부문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은 LNG 관련 개발경험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중·하류부문의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제전개전략'과 같은 중장기적 정책패러다임에 근거한 정책집행은 투자국 중심주의가 초래하는 상대방 국가로부터의 반목을 줄일 수 있으며,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효율적이다. 더욱이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실행함으로써 상호신뢰의 확대뿐만 아니라,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절한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성과위주의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협력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윤석상 2017, 139~140).

그러나 일본의 LNG 전략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경쟁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협력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LNG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바이어 파워가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LNG 거래시장의 주도권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경쟁의 중심에는 바로 전세계 LNG 교역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지역 내에서 LNG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선물거래소도 가장 먼저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본에 허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PNG와 LNG 인프라를 모두 갖춘 유일한 역내 국가이며, 성장잠재력도 가장 앞선다. 특히, 중국은 일본에 허브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 미국, 일본, 후주의 인도-태평양 에너지 밸류체인이 완성되기 때문에 반대한다. 천연가스를 수출해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동북아 가스 허브가 필요하다. 중국에 허브가 생기면 위안화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일본에 생기는 것을 가장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는 LNG를 수입하고 PNG도 도입하고 있는 중국이 허브가 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동북아 천연가스 허브 구축 노력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국가들의 지나친 LNG 의존과 함께 대체 공급원인 PNG 도입이 거의 없으며 역내 국가 간 연계 파이프라인이 없고 역내 통합 파이프라인 저장시설 연계 부족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 프리미엄(실제는 아시아 핸디캡)'이 존재하고 있다(여시재 2019.12.13).

따라서 LNG 허브가 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이 서로 경쟁하고 있지만, LNG 허브화를 위해서는 LNG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국제 LNG시장은 신규 수요국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0여개 국가 LNG를 도입하고 있으며, 거래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장기계약에 의한 거래와 목적지제한조항, 그리고 상대적으로 LNG 가격이 높아 수입 LNG의 재수출 및 포트폴리오 비즈니스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장기계약에 따른 손해를 상쇄하고 거래의 용이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목적지 제한조항의 완화·철폐, LNG 시장의 자유화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공급자 위주인 기존 국제 LNG 거래시장을 한국과 일본의 공동협력을 통해 '바이어 파워'가 행사되는 시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LNG 거래시장의 변화는 LNG 허브화의 전제조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LNG 도입에도 반드시 해

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일본도 이 부분에 대해 'LNG 시장전략'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협력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LNG 허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LNG 시장의 규모가 커져야 한다. 즉, LNG 허브화는 LNG 거래에 참여하는 수요자들을 얼마나 많이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LNG 수요국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류부문의 개발과 자유로운 거래를 통한 공급량 증대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LNG 소비와 직결된 LNG 도입기지 등의 인프라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일본도 동남아시아 국가에 FSRU를 중심으로 LNG 인프라 확충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LNG 중·하류부문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경쟁은 손실을 초래하는바 위험을 헛징하기 위해 제3국 인프라 투자에 경쟁 지양적인 파트너십을 맺을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성훈, "세일가스 경제 효과 부풀린 미국의 속내," 우리사회, 2013년 1월 16일.
배극찬,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ASEAN," 외교광장, 2018년 2월 21일.
손 열, "기로에 선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공생을 위한 한일 협력 모색해야," EAI 특별기획 논평 시리즈, 동아시아연구원, 2019년 6월 1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6-18호, 2016년 5월 20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9-30호, 2019년 8월 26일.
여시재 에너지연구팀, 『미·중·일·러 모두에 한국이 차선-동북아 협력적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으로 가야』2019년 12월 13일.(<https://www.yeosijae.org/posts/786>(검색일: 2019.12.15))
윤석상, "일본의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협력에 관한 고찰: 정책패러다임과 정책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국제관계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42호), 2017년 여름호.
중앙일보, "한국, 방위비 어어... '미국 LNG 폭탄청구서' 날아온다" 2019년 12월 11일.
한겨레,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 2019년 11월 27일.
エネルギー庁 資源・燃料部, 『LNG政策の展開』2019年11月.
大庭三枝, "インド太平洋は誰のものか - ASEAN の期待と不安," 『外交』Vol.52, 2018年11・12月.
外務省, 『質の高いインフラパートナーシップ』(2015年5月 21日)
https://www.mofa.go.jp/mofaj/gaiko/oda/about/doukou/page18_000075.html(검색일:

2019.12.22.)

経済産業省, 『LNG市場戦略～流動性の高いLNG市場と"日本LNG ハブ"の実現に向けて～』2016年5月.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日本のLNG産業の将来展望に関する考察 - LNG輸入開始から50周年を迎えて -』 Mizuho Industry Focus, Vol. 25, 2019年3月28日.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天然ガスの安定供給確保に関する調査報告書』2019年2月28日.

永井一聡, "東南アジアで進むLNG受入基地の建設 - 天然ガス生産地域から需要地域へ -" 『石油・天然ガスレビュー』 Vol.50, No.2, 2016年3月.

日本エネルギー経済研究所, 『平成30年度エネルギー戦略立案のための調査・エネルギー教育等の推進事業(国内外のエネルギー動向に関する調査・分析)報告書』2019年3月.

동아시아 지정학의 현재,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전략적 행보

서승원*

1. 지정학의 부활과 새로운 행위자들

2010년대 이래 전문가들 사이에 이른바 동아시아 '지정학의 부활(또는 귀환)' 논의가 활발하다. 주된 관심은 물론 미국·중국 간 경쟁이다. 혹자는 항행의 자유와 해양 영유권 분쟁, 그리고 해양의 경제적 권리를 말하고, 혹자는 중국의 부상과 그에 대한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 와해를 거론하며, 또 혹자는 신냉전의 도래를 예측하기도 한다(Robert S. Ross, "The Revival of Geopolitics in East Asia: Why and How?" *Global Asia*, Vol.9, No.3[Fall 2014], pp.8-14; Walter Russell Mead, "History Isn't Dead Yet: Asia and the Return of Geopolitics," *Global Asia*, Vol.9, No.3[Fall 2014], pp.20-23; Robert D. Kaplan, "Asia's Coming Era of Unpredictability," *Foreign Policy*, September 1, 2019). 그와 더불어 앞으로의 미·중 경쟁이 과학기술 패권 다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엔쉐통 <2023년 세계사 불변의 법칙>[글항아리, 2013]). 이러한 논의들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을 결정적인 요인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전제만으로 충분한가? 트럼프 정권 출범 이전부터 미국은 대외적 관여를 부분적으로 축소시켜 왔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고립주의적 경향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후퇴와 동시에 이들에 버금가는 흐름도 존재한다. 개별 국가들의 행위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지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점이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2013년 이래 대중 포위망 결성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패전 후 70년 만에 지정학 게임에 가담하기 시작했다(서승원 <근현대 일본의 지정학

적 상상력>[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북한은 지정학 게임의 총아인 핵·미사일 능력을 바탕으로 미·중 간 경쟁을 자극하거나 대미 위협을 가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무력화 또는 이완을 도모한다. 한국 또한 지난 20년 동안 진보-보수정권 모두 고래들 사이에 끼인 새우 신세를 탈피하고자 다양한 중견국 외교 전략을 부단히 모색해 왔다. 여기서는 지정학의 시점에서 최근 한·중·일 3국의 대외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우리가 전략적 과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다(단, 북핵 등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동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 '미일동맹 vs 중국' 기조가 설정되다

탈냉전기 동아시아 지정학적 지형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중·일 3국 간 관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돌이켜 보면 미국이 주도한 냉전기 대공산권 봉쇄정책과 샌프란시스코체제(차륜형 동맹망)의 핵심 타깃은 중국과 북한이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이 주의를 기울인 것이 일본의 중국 접근 저지였다.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전격적인 중국 방문(미중 화해)과 그에 이은 중일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염두에 둔 미일동맹의 근간은 훼손되지 않았다. 그 후 미일동맹의 위기가 도래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이었다. 냉전 해체로 동맹의 존재 이유(raison d'être)가 의문시되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미일 양국 내에서 '중국위협론'이 제기되었다. 태평양 양안의 대중 강경파들이 중국을 소련을 대체하는 새로운 가상적으로 설정하면서 제휴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가 미국의 전략적 선호를 반영한 1995-6년의 미일동맹 재정이었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보수 본류가 주도하는 일본 자민당 정권은 중국과 대립각을 세울 의사는 없었다. 국면은 1990년대 후반과 21세기 초반 보수우파 세력이 자민당의 권력을 장악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은 자신의 야스쿠니신사 공식 참배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로 중국 및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일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한국 및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도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미일관계에 부정적인 결과가 생기면 그때 타국과 우호관계를 강화하여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나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아사히신문〉, 2005.11.18.)면서 미일관계 강

* 現 고려대학교 일어일본학 교수
일본 게이오대 법학 박사. 前 글로벌일본연구원장 및 일본 간토키쿠인대 법학부 교수

화 기초를 천명했다. 그는 2001년 9.11 테러사건 후 미국 부시 정권이 추진하는 미일 동맹의 지역화·글로벌화를 적극 수용했다.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 되기를 바라는 미국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중일관계를 미일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다. 이로써 미일동맹에 있어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되고 타이완은 공통 전략목표에 포함되었다. 미일동맹을 통해 미국의 세계전략을 보완하고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여 정치대국으로서 중국에 뒤지지 않는 지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적 선택에 다른 아니었다(아마코 사토시 <중국·아시아·일본>[치쿠마서방, 2006]).

중국 측의 입장에서 미일동맹 강화라는 압박에 대한 국면 타개가 요구되었다. 고이즈미를 뒤이은 자민당 아베 신조 내각과는 야스쿠니신사 참배 중지를 조건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적 호혜관계'에 합의했다. 2007년 4월 원자바오 총리가 방일하여 일본의 중국 개혁·개방 노선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는가 하면, 2008년 5월에는 후진타오 주석이 국가주석으로는 10년 만에 방일했다. 후진타오 지도부가 '신사고 외교'를 내걸면서 의도한 것은 일본에 접근함으로써 미일 양국의 대중 강경노선을 억제 또는 완화하는 것이었다. 특히 강하게 의식한 것은 2005년 2월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의) 결정이었다. 이 회의에서는 양국의 공통 전략목표로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 촉진,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건설적 역할 수행 환경, 대화를 통한 타이완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군사적 투명성 향상 촉구, 해상교통의 안전 유지가 거론되었다. 2009년 9월 일본의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면서 중일관계는 한층 더 진전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수상이 자민당 정권의 지나친 대미 의존 자세를 비판하면서 중국 중시를 천명함과 동시에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공동체를 표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두 가지 암초가 중일관계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2009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자기주장이 강화되기 시작한 점이다. 중국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넘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국방비는 이미 2004년 일본을 추월한 상태였다.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활동도 갈수록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다른 하나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다오위다오 인근에서 중일 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진 점이다. 2010년 9월 중국어선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충돌 사건을 계

기로 중국은 정상회담 중지, 희토류 수출금지 등 대일 압박 공세를 펼쳤다. 게다가 2012년 민주당 정권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조치는 중국 측의 맹렬한 반발, 그리고 일본 측의 강경자세로 이어졌다. 이 와중에 민주당 정권은 센카쿠열도가 미일동맹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 대해 미국 측의 지지를 얻은 대신 대중 정책의 독자성 저하를 감수해야 했다(Reinbard Drifte, "The Senkaku/Diaoyu Islands Territorial Disputes between Japan and China," *UNISCI Discussion Papers*, Vol.32, 2013).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일 강경조치는 민주당은 물론 자민당 내 친중파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고 미일동맹 중시론자들의 득세를 초래했다.

3. 2010년대, 급변하는 동아시아 지정학

2012년 후반과 2013년 초반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에서 각각 새로운 정권이 등장했다. 이후 한·중·일 3국 간에는 서로 물고 물리는 복마전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시진핑 지도부의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공세 강화였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 자신이 강국(強國), 강군(強軍)을 제창하면서 진두지휘에 나섰다. 함정 및 정찰기를 동원한 정찰업무 등 물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 '분쟁'의 존재를 인정시키기 위한 행위였다. 이에 대해 아베 정권은 철저한 비타협, 그리고 중국위협론 강조로 맞대응했다. 국민의 생명·재산과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하게 지킬 것이며 무력행사에 의한 현상변경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이로써 중일 간 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는 치킨게임 양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에 박근혜 정부와 아베 정권 사이의 관계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위안부 군 관여 인정) 및 무라야마담화(식민지 지배 사과)를 수정할 의향을 언급함은 물론 급기야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는 등 역사수정주의 행보를 이어갔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면서 정상회담 중지 등 대일 강경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한일, 중일 간 갈등을 배경으로 2014-5년 시점에 한중 양국의 대일 과거사 연대가 형성되었다. 대일 연대를 주도한 것은 시진핑 지도부였다. 중국 측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한중 FTA 타결, 북한 비핵화를 위한 베이징의 압력, 한반도 미래(통일)에 관련된 한중 간 대화를 제안하면서 미국 사드(THAAD) 시스템 한국 배치 반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한중 공동 비

판, 그리고 일본과의 과거사 및 영유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요청했다. 한국 측은 위 세 가지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사드와 집단적 자위권,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그리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보조를 같이했다.

한일 위안부 갈등은 미 오바마 정권과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동아시아 전략 추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국내 반일정서를 배경으로 좌초된 바 있었던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여전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GSOMIA는 한일 간 안보협력을 강화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로써 북한의 도발을 대비함은 물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한다는 아시아 재균형전략(rebalancing strategy)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사실 아베 정권도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한·미·일 3자 안보협력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극히 중요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적 틀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국가 안전보장에 대하여>, 2013). 하지만 아베 정권은 한일 불협화음으로 이를 포기한다.

위와 관련해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미일 양국, 특히 아베 정권의 대외적 행보다. 일본 측은 당초 미 오바마 정권이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로 간주하며 온건한 자세를 보이는 점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2기 오바마 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자 이를 환영하면서 중국포위망 구축의 선봉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미일동맹 강화 차원에서는 두 가지 중대한 조치를 취했다. 하나는 전임 민주당 정권의 환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방침을 적극 계승한 점, 다른 하나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을 결정하고 그와 관련된 안전보장법제를 성립시킨 점이다(이 과정에 미국 측은 센카쿠 열도가 미일안보조약 5조에 해당된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했다). TPP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두 축으로 미일동맹을 한층 더 강화하여 중국에 대항하자는 생각이었다. 아베 정권이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제시한 키워드는 바로 ‘중국 역지’였다. 그에 더하여 아베 정권은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3자 간 또는 4자 간 안보협력의 강화에 나섰다. 대륙 권위주의 국가,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및 인도양으로의 해양 ‘팽창’(또는 ‘남하’)에 대항하여 해양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논리였다(이른바

‘민주주의 안전보장 다이아몬드’ 구상).

중국이 부상하고 이에 대해 미일 양국이 서진(西進: 중국에 대한 동남향에서 압력)하는 국면에서 중국 또한 서진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한다는 장기적 비전 아래 주변국 외교를 강화하고 또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을 포함한 각종 지역구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존 패권국 미국과 동쪽에서의 정면충돌을 우회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에 교두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지정학적 발상에 따른 것이었다.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유대관계 심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해외 시장 개척, 그리고 해군력 강화 등에 역점이 두어졌다(서정경,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 <국제정치논총> 55권 2호[2015]). 흥미롭게도 여기서 미일 양국과 중국의 전략적 발상이 매우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대두한 전통 지정학, 특히 해양지정학이다. 미일 양국에게 니콜라스 스파이크만(Nicholas Spykman)의 림랜드(rimland) 개념은 중국 인근의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적용된다. 미영동맹이 유라시아 주변의 핵심지역을 장악해야 한다는 알프레드 마한(Alfred T. Mahan)의 관점을 응용하여 미일 중심의 동맹 네트워크가 서태평양·인도양의 제해권을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동중국해의 제해권 장악, 남중국해의 중국 내해화, 그리고 제1열도선과 제2열도선 사이의 완충지대화를 도모하면서 서쪽에서 일대일로 구상을 펼치는 중국의 전략도 마한의 해양강국론이 많은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인다(서승원 외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트리펍, 2017], 290쪽).

미(일)-중 간 지정학적 경쟁이 가속화하면서 한국 및 아세안국가들 일종의 ‘대리경쟁’(proxy competition) 상황에 내몰렸다(Jae Ho Chung, “South Korea’s Strategic Approach to China(or Lack of It),” G. Rozman (ed.), *Joint U.S.-Korea Academic Studies*, The ASAN Forum, Vol.29[2018]).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중국에 경제를 의존하는 ‘이중적 위계질서’(dual hierarchy)에 의한 딜레마이기도 했다(G. J. kenberry,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131, No.1[2016]). 미중 경쟁에 대처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반응은 대동소이한 것

이었다. 말레이시아의 모하메드 사브 국방장관이 2019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리라대회에서 한 발언은 그 심정을 잘 드러내준다. 즉, “만약 남중국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세계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군사외교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사랑하며, 동시에 중국을 사랑한다.”

박근혜 정부도 가능하면 미중 경쟁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자 했다. 미일동맹과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화, 즉 ‘전략성 모호성’을 말한다. 2016년 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사드 배치에 미온적인 반응으로 일관했으며, 이명박 정부와 달리 한미동맹에서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지도 않았다. 한미동맹의 대중 미선화에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이다. 전술한 과거사 문제,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는 오히려 친중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중 FTA에 더하여 TPP가 아닌 중국이 주도하며 미국이 반대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더욱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된 중국 역할에 대한 다소 과장된 기대, 국가 경제에 있어서 대중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강대국 간 지정학 게임에 대한 거부감과 중견국 외교 욕구 등을 반영한 행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친중적 행보는 사드 배치 결정과 중국 측의 경제 보복으로 종결을 고한다. 한편, 미 오바마 정권은 아베 정권에 압력을 가하여 2015년 12월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2016년 말에는 한일 GSOMIA 서명을 이끌어냈다. TPP는 차치하더라도 재균형 전략을 위한 한·미·일 간 군사·안보적 틀은 일단 갖춰진 셈이었다.

4. 트럼프 리스크, 아베의 방향전환,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어프로치

2017년 초 문재인 정권과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면은 다시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은 오바마 정권에게 한 것과 유사하게 트럼프 정권에 접근했다. 센카쿠 열도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개념을 설명·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일 양측은 일단 2017년 11월 FOIP에 공동된 전략적 우선순위를 둔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축인 TPP는 트럼프 정권이 같은 해 1월 이를 공식 폐기함으로써 아베 정권의 전략적 패러다임에 결정타를 안겨주었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면서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양자주의적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상황이었다. 아베 정권의 초기 대응은 중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TPP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으로 변경하여 협상 타결을 추진하는 방식이었다.

시기를 같이해 아베 정권의 행보에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2017년 봄 아베 정권의 2인자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중국을 방문하여 AIIIB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전한 것이다. 같은 해 6월에는 아베 수상 자신이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함과 아울러 2018년 1월 국회 연설에서 다음처럼 발언했다. 즉, “우리는 FOIP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방향성에 근거하여 우리는 또한 중국과 협력하여 아시아의 증대되는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대중 전략에 있어서 정경분리, 즉 군사·안보와 경제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였다. 2018년 10월 아베 수상의 중국 국빈방문은 그 정점이었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세 가지 원칙-경쟁에서 협력으로; 위협이 아닌 파트너 관계 구축;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레짐 발전-에 합의했다. 정치·안보적으로는 일단 상호 간 대립을 지양하면서 관계 개선을 꾀하고(일종의 휴전을 의미), 경제에서는 중국과 보조를 맞추면서 자유무역주의를 수호하자는 합의였다. 아베 정권의 대중정책 차원에서 보면 군사·안보적으로 중국포위망 구축을 목표로 한 지정학 게임을 접어두고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선별적인 협력도 마다하지 않는 지정학 게임으로 방향을 전환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 행보는 더욱 특기할 만하다. 정권 출범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는 대략 세 가지 대외적 도전에 직면해야 했다(Seung-won Suh & Nam-eun Kim, “Facing China Differently and Equally: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n and Japanese Policy Behavior,” forthcoming).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해서는 전임 박근혜 정부의 ‘중국 중시’라는 원교근공 어프로치를 전환하여 북미 간 직접 대화를 유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남북 간 화해 프로세스(판문점 및 평양 정상회담)를 마중물로 하여 북미 정상회담(싱가포르 및 하노이 정상회담)을 추동하고 김정은-시진핑 정상회담에 지지를 표명하는 방식이었다. 둘째는 미중 간 경쟁에 대한 대처 방식이었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3 Nos’(사드 추가 배치 중지;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참)

를 선언함으로써 중국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미국 측이 참여를 요구하는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FOIP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상호보완적이라는 아베 수상의 취지와 유사한 것이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와 유사하게 강공책을 구사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관철하고 아베 정권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이의제기와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해서는 GSOMIA 종료 선언으로 맞대응했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도전들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다(참고로 신북방정책은 북핵 문제의 진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중 간 사드 갈등(특히 중국의 경제보복)이 계속되고 미중 간 전략적·경제적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반도 및 주변 4대국에 치우쳐온 한국의 대외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새로운 균형 외교, 중견국 전략(middle-power strategy)을 펼쳐나가기 위한 방책이라 하겠다. 방점은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관계를 주변 4대국과의 관계 수준으로 격상시키는데 놓였다. 이를 통해 정치·안보적으로는 미중 양국의 상호 충돌하는 압력을 조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며 자신의 전략적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Lee, Jaehyon, "Korea's New Southern Policy," Issue Briefs, The AS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une 21, 2019). 이들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향후 중국에 버금가는 새로운 시장으로 기대되었다. 예를 들어 2018년도 아세안은 한국의 두 번째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했으며(무역액 1,600억 달러), 앞으로 무역·투자 규모는 한층 급신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세안 및 인도와는 위협인식이 상이하고 안보협력의 경험이 많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4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는 하지만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는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를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경제적·외교적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절호의 시도로 생각된다.

5. 열리고 있는 지정학적 공간에서의 방책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외전략은 시의적절하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향성은 몇 가지 새로운 국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우선, 미중 양국의 지역 전략·구상은 불안전하며 장기지속적이지도 않을 것이다. 얼마 전 미 국방성은 <인도-태평양전략전략보고서>(2019.6)를 발표했다. 하지만 미 트럼프 정권이 예산상으로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미국 우선주의 주장을 불편해하는 동맹·우방국의 실질적인 동참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세안 중심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는 동남아 국가들의 격정과 한일 안보 협력 정체 등을 고려할 때 차륜형 동맹을 '유연한 지역 네트워크'(a networked region)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우려를 갖게 한다(P. Parameswaran, "Assessing the New US Free and Open Indo-Pacific Progress Report," *The Diplomat*, November 5, 2019). 한편, 중국 시진핑 지도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도 '5통'(정책소통, 인프라 연결, 무역 원활화, 자금유통, 민심상통)을 내걸고는 있으나 채무 함정을 비롯해 참여국들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고 있으며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다(한동균, "주춤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명과 암," *JPI PeaceNet*, 2019-30). 미중 양국의 리더십에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덧붙여 미중 양국의 경쟁은 군사·안보 중심의 지정학이 아닌 지경학적 차원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내외에는 미중 경쟁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간, 좀 더 넓게 보면 중러 중심의 대륙세력과 미일 양국 및 유라시아 연안부 해양세력 간에 '신냉전'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고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대부분은 한국, 미국, 일본의 대중 또는 대북 강경파들이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그칠 개연성이 크다. 우선 작금의 미중 경쟁은 무역전쟁, 기술패권 경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당장 서태평양과 인도양의 제해권을 넘보지 않는 한-당분간 그럴 능력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냉전 시기처럼 전면적인 대중 봉쇄라는 극약처방은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측도 자신이 누누이 밝혀온 것처럼 미국에 대해 군사적인 정면 도전은 회피하고자 한다. 그 대신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한 경제적 지역통합, 즉 지정학 게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한국은 물론 인도, 호주,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일본도 지정학 게임에 본

격 가담하기 시작했다.

한일 양국의 지정학적 어프로치가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은 흥미롭다. 아베 정권은 당초 미중일 3각 관계의 틀에서 미중 간 지정학적 경쟁을 조장하고자 했다. 그리고 인도, 호주, 동남아 국가들을 엮는 중간적 허브 역할을 맡고자 했다. 대미 지정학적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개헌에 이르는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이는 전통 지정학적 발상에 근거하여 자국의 외교적 정체성을 강대국으로 정의하고 미일동맹을 통해 중국의 세력권 확대 저지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해양·민주주의 연대라는 아베 정권의 기치는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정권은 군사동맹과 TPP를 패키지로 미일 양국이 서태평양·인도양을 공동 경영한다는 아베 정권의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아베 정권은 결국 강대국 정치를 포기하고 중견국 외교로 회귀할 수밖에 없었다. FOIP와 일대일로로 상호보완성 강조가 그 증거이다. 한편, 한국의 역대 정부는 미중 간 군사·안보적 대결에 강한 거부감을 가져왔으며 북한 문제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프로세스 추진은 물론 미중 간 긴장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왔다. 다소 수동적이지만 전형적인 중견국 외교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서남방에서 새로운 경제·외교적 지평을 넓힘으로써 자국의 지정학적 딜레마를 극복하고자 한다. 한일 양국은 결국 미중 간 패권 경쟁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의 지정학적 존재감을 증대시킬 것이며, 양국이 함께 노력한다면 지정학 게임 그 자체를 저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중견국 전략 그 자체에 내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모종린은 그 최대의 장애 요인으로 강한 민족주의를 거론한다: 주변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안정, 세력균형, 그리고 하드 파워를 강조한다; 안보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다; 국익을 협소하게 정의하여 단기적 이익과 하드 파워에 초점을 맞춘다; 순혈 민족주의가 강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힘들다(Jongryn Mo,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International Journal*, Vol.71, No.4, 2017). 핵심은 결국 약소국 정체성·의식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이다. 미중 사이의 조화를 말하지만 내

실은 미중 대립에서의 탈피를 욕구한다.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중국이나 미국의 역할에 적지 않게 기대해 왔다. 강대국에 의존하는 약소국 외교라는 본질을 내재한 중견국 외교라 하겠다. 게다가 한반도가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충돌 지점이자 완충 지대이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의 피해자라고 하는 지리결정론(반도숙명론)적 사고도 여전히 뿌리 깊다(지상현, "반도의 숙명: 환경결정론적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검증," <국토지리학회지> 제46권 3호, 2013). 강한 민족주의(엄밀하게 말하면 강대국의 힘의 정치에 대한 방어적 민족주의)는 이러한 약소국 의식 및 지리결정론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이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비로소 우리의 중견국 외교·전략은 그 진정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터이며 새로운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관계,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임진희*

1. 2019년 12월 23일, 한중 정상회담 개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난 2019년 12월 23일(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향했다. 이는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 것이며, 그 외에도 중국 베이징(北京)과 쓰촨 청두(四川 成都)에서 한중, 한일 정상회담 등을 가질 예정이라 전해진다. 그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는 중국 외교부 부부장 뤼자오후이(罗照辉)와 예빈사(礼宾司) 및 아주사(亚洲司) 부국장, 이후 청두 슈양리우 공항에는 왕핑차오(王凤朝) 쓰촨성 부성장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했다고 한다. 앞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임에도 차관보급 쑹쉬안요우(孔铉佑) 외교부 부장조리가 나와 '홀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비교하면 한층 높아진 영접이었다.

또한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했던 총 9차례 식사 중에 중국 지도부와 식사는 한두 차례에 그치고 수행하는 한국 측 인사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며 불필요한 '혼밥'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첫날 오찬을 중국 서열 1위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 만찬을 서열 2위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와 함께 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나아가 발표에 따르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 회담은 당초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총 30분 예정이었으나 25분 더 지난 12시 25분까지, 청두에서 진행한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은 18시 30분에서 19시까지 총 30분 예정이었으나 11분 더 지난 19시 11분까지 이어졌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중 정상 회담은 지난 6월 27일 오사카 G20 정상회의

* 現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중국 人民大學 국제정치학 박사

이후 6개월 만에 갖는 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오찬과 회담을 통해 양국 간 교류 협력 증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양국은 통하는 부분이 더욱 많아졌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양국의 공동 입장은 양국 협력의 튼튼한 기초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시 주석은 최근 교착 상태에 대해 중한은 복미가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도록 힘을 모아야한다 밝혔고, 문대통령도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미중의 무역 분쟁과 관련, 시 주석은 협력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싸우면 모두에게 상처가 남는다고 중국은 향후에도 충돌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도 양국이 건설적 대화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하며 최근 미중 간 이룬 '1단계 무역 합의'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양국 정상은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등을 계기로 하는 스포츠 협력, 미세먼지 등을 포함하는 환경 협력 등에 관련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정례화를 강조하였고, 시 주석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시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에서는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에 한중 및 한일 정상회담이 같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기에 큰 기대를 모았다. 한중 관계만 보면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에 양국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고, 정치와 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의 민간 분야도 전반적으로 교류가 침체되었다. 그러자 대중 의존이 높은 한국은 매우 피해가 컸고, 그간의 더딘 회복에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2020년 시진핑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은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 북핵 문제와 관련 해법에 양측 정상이 공감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분석과 여론이 지배적이다. 특히 시 주석 방한 이후 양국 관계 회복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물론 일부가 바랐던 것처럼 공식적으로 한한령 해제를 선언하거나 미국이 관련되는 사드 및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관한 갈등을 시원스럽게 해결하지는 못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언론이 한반도와 북핵, 미중 갈등과 연계되는 남북관계나 한미관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홍콩 및 신장(新疆)에 대한 양국의 의사소통 문제를 우려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심지어 불필요하게 서로를 공격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애초부터 이번 방문의 목표가 아니었고, 상식적으로 제3국이나 다른 영역이 관계되어 있기에 이번 회담을 통한 해결은 사실 불가능했다. 나아가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의 회복 전환점 내지는 그 단초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2. 1992년-2019년, 굴곡진 한중관계

1972년 미중 수교와 1978년 중국 개혁개방 정책 추진은 글로벌 정세와 더불어 한중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온 배경이었다. 과거 냉전 시기 중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있어서 상대 진영 일원으로 대립과 적대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중국에게 한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 경험과 자원을 제공할 협력 대상이 되었고, 한국에게 중국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와 세계 최대 규모 국내 시장을 가진 기회의 땅이 되었다. 이는 한중이 군사적 대립과 경쟁을 넘어 서로의 안정과 번영이 자국에게 더 이롭다고 인식하게 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또한 1992년 여름 남북관계 개선과 더불어서 한중의 수교에 전략적 공간을 제공한 배경이 되었다.

1992년 수교 이후에 한중관계는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였다. 우선, 정치외교 분야는 크게 1992년 우호협력관계(友好合作關係),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全面合作夥伴關係), 2008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合作夥伴關係) 단계를 밟으며 발전하였다. 둘째, 경제 분야의 경우 1992년 50.3억 달러에서 2018년 3134.3억 달러까지 무역액이 급증하였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이다. 셋째, 과학기술, 교육, 사업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있다. 2018년 기준, 매주 약 1200차례 항공편이 양국 주요 도시를 이어주고 있으며 총 947.1만 명이 양국 국경을 넘었고, 총 12.7만 명의 학생이 상대 국가에서 유학하고 있다.

양국 관계 발전의 주요한 요인을 자세히 보자면 첫째, 경제의 상호보완 속성이 큰 역할을 하였다. 당시 중국은 경제 발전을 국가적 목표로 삼았고, 한국은 그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인접국의 하나였다. 한국도 중국의 국내시장,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그 동인은 충분하였다. 둘째, 정치적 측면을 보자면 중국은 북한의 연이은 핵개발과 도발로 회의적인 시선이 늘어났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기대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려 노력했다. 한국 역시 북핵과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 중국의 협조와 지원은 필수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지리적 인접성, 오랜 교류로 인한 문화적 유사성 등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주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는다. 이는 즉각 중국의 각종 제재 조치와 반한 감정 표출로 이어졌다. 한국 관광 제한, 한국 제품 불매, 한국 문화 상품 배척, 한국 기업 표적 수사 및 영업 정지 등 무유형 보복성 조치에 더해서 뺏겨진 애국심이나 민족주의 뒤에 숨어 한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일부 중국인의 과잉 행위까지 전해지면서 한국인의 반중 감정까지 함께 높아졌다. 불과 몇 년 전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라 했던 언론의 찬사가 무색하게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교육 등 전 분야를 막론한 한중관계의 침체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손실은 막대했고 여파는 지금도 여전하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상황에 다소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호감이 높았다. 문재인 후보가 야당을 이끌고 경선을 거치면서 사드의 배치에 부정적 의견을 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중국에 특사를 파견했고, 중국도 그를 맞아 파격적 자세로 환대했다 전해진다. 당시에 중국은 한국이 결정을 돌이킬 여지가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7년 여름 결국 사드는 한국에 배치되었고, 중국은 각급 채널을 통해 불만을 표하며 보복성 조치를 배가하였다. 한국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로 현실에 적응하고 일부는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 상황을 보면 단순한 봉합에 불과하고 사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이러한 배경은 사드가 단순히 한중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과 미국이, 나아가 글로벌 정세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다. 한국과 미국은 사드 배치를 결정,

발표할 당시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 국내외의 적지 않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인접국 중국의 경우 경제적 부상 이후로 글로벌 범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벌이고 있기에 특히 민감했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려 한다고 보았고, 한국의 결정은 미국의 이러한 의도에 동참한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중국은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고, 직전까지도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더욱 분노하였다.

3. 2019년 한국과 중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올해 한중관계를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주도해왔던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가 스스로 혼란과 분열의 상태로 접어들었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견제로 동북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이 더불어 취약해졌다. 나아가 북핵, 홍콩과 같은 국내적 문제도 글로벌 정세와 연계되며 각국에 영향을 미쳐왔다. 현재 한중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차대한 틀은 글로벌 차원에서 벌어지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그에 따른 각국의 합종연횡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다음으로 한국, 중국, 미국 등의 국내 정세와 문제가 제한적 수준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실정이다. 이를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상술한 것처럼 1978년 개혁개방 이후로 중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해 현재는 미국과 글로벌 주도권을 다투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다. 중국은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발언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특히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집권의 이후 발간된 미국의 관련한 보고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내지는 “현존하는 국제질서의 도전자”로 규정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본격화된 양국의 주도권 경쟁과 미국의 전략적 긴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에게 중국은 유럽, 일본 같이 익숙한 또는 그들과 같은 가치나 제도를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기에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불안과 위협에 보다 가까웠다.

2018년에 시작된 미중간 무역 갈등 역시 전략적 경쟁의 일환이다. 이는 2018년 7

월 미국이 34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중국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미국 제품에 같은 규모의 보복 관세를 물리겠다고 답하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이 관련한 협상을 통해서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는 지난해 이어진 협상을 지켜보며 이러한 갈등이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제는 많은 이들이 미중 협상이 설사 타결된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봉합에 불과하며 향후 양국 간의 긴장과 갈등은 무역을 넘어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정부가 처음부터 부상한 중국의 견제라는 정치적, 전략적 의도에서 움직인 것이라 단정하긴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확실히 미국의 리더와 전략가 그룹은 중국 문제를 보다 복합적이며 중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의 일환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향후에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세력 전이와 전략 경쟁은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가 확실한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 갈등이 끝을 보여도 이를 넘어선 안보, 이념, 제도, 기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다분하다. 이는 국익에 관련된 매우 중대한 문제로 동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야에 관계없이 일어날 일정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은 양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 중국과 인접한 주요국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다. 미국은 글로벌 범위에서 자신의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자국의 발전을 저지하고 영향력 확대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여겨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과 북한은 지정학적, 전략적 요지에 위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북핵과 사드에 관련한 과거이다. 한국은 북한 핵개발,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와 주권에 관련한 문제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면 미중의 전략적 게임에 실전용 카드로 활용된 측면이 많았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국내 이슈와 정책도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에 지대한 영

향을 받는다. 한국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인 북핵과 한반도 이슈가 때로는 본질과 문제 해결이 아닌 남북을 자기 영향력 아래 두거나 전략 게임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미국과 중국에 좌우되는 실정이다. 또한 한국은 최근 들어서 국내 이슈와 관련된 정책도 여론 분열과 갈등이 심한 상황인데 이에 더한 미중의 압력이 해당 사안을 더욱 복잡하고 해결이 어렵도록 만드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근래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자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문제에 미중의 갈등이 연계되며 더욱 곤혹스런 상황이다. 실제 미국은 홍콩, 타이완, 신장 등의 문제에 적극 개입하며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4. 2020년 한중관계, 어떻게 봐야하나

지난 12월 23일 한중 정상회담 전후, 한국에는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중을 계기로 사드 사태 이후에 냉각된 한중관계가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는가 점치는 언론의 보도가 증가하였다. 사실 2017년 이후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측면이 있지만, 2019년이 끝나가는 지금까지 사드 문제는 여전히 양국 관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2020년 내년의 한중관계는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인가. 2019년 한국은 북한, 미국, 일본 등의 동북아 국가와 관계에 굴곡이 많았다. 그리고 이러한 굴곡에 중대한 근원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갈등에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과 전략적 배경에 속히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술한 것처럼 한국은 사드 배치 결정과 과정에 작지 않은 미중의 압력을 받았다. 미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발표, 도입 과정에 이를 기정사실화 또는 돌이키려는 목적에서 압력과 보복성 조치를 이어갔다. 한국은 수차례 사드 배치는 북한 공격에 대한 방어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이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글로벌 연대나 MD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며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나아가 최근에는 미국이 한반도 주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는 한중간에 제2의 사드 사태로 화할 수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역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쉽지 않은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 중의 하나는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중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입장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2017년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전일까지 감돌았던 한반도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한다. 한국은 모처럼의 기회를 포착하고, '연내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등의 관련 구상을 하루 빨리 실현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북한과 미국의 양자 관계나 중재에 집중하면서 한반도 특히 북한 지역에 관한 중국의 지분, 내지는 역할에 대해 분명치 않은 입장과 태도를 보인다. 이에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자국의 역할과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였고, 이는 사드로 이미 냉각된 양국 관계를 더욱 위축시켰다.

한편으로 중국은 한국의 한미동맹, 주한미군 이슈에 상당히 민감하다. 한국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목적과 범위를 한반도와 북한에 한정시키고 있지만 미국의 전방위적 견제를 우려하는 중국은 끊임없이 그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국이 부상하는 자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유용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양국 간에 상이한 인식과 입장도 문제가 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제 미국이 남북 범위를 넘어 중국이 주요 목표로 보이는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적 범위 군사 작전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에 그러한 우려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미중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는 한중관계 회복의 필요성과 동인이 모호하다. 과거 한중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졌던 것은 사실 상대의 경제 산업이 상호보완적 구조였는데 그 원인이 있다. 중국은 한국의 자금력과 기술이 필요했고, 한국은 중국의 노동력과 시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세계 2위 규모 국내총생산과 세계 1위 규모 외환보유고를 자랑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나아가 자금력을 바탕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애쓰며, 이제는 한국의 협력이 예전만큼 절실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수출입을 모두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게 한국의 필요성과 가치가 낮아졌고, 또한 중국이 필요할 경우 한국을 공격할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여론은 상당히 악화된다. 한국에서는 중국이 힘에 기대어 한국에 간섭하며 압박을 가한다는 생각에 반한 감정이 증가하였고, 중국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편승해 중국의 이익과 감정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혐한 정서가 팽배해졌다. 최근 일련의 중국 지도자 관련 발언을 보면 한중 관계의 개선 희망이 보인다. 물론 한중관계는 지시간 몇 년 보다는 나아져야만 한다. 그러나 국가 역량과 주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 같은 관계로의 복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0년 새로운 한중관계와 국제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실과, 향후 이어질 미중 갈등의 실체, 한국의 제반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한반도 대전환과 위기, 한국의 길

이재봉*

1. 한반도 대전환과 위기

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 및 6월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대전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해왔다. 네 가지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첫째, 1945년 해방과 함께 들어선 73년짜리 분단체제가 무너지고 통일의 길이 열리는 듯했다. 둘째, 1948년 북한 정부수립 때부터 지속된 70년짜리 북미 적대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바뀌는 것처럼 보였다. 셋째, 1950년 전면전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이 68년 만에 완전히 끝날 것 같았다. 1953년 7월 맺어진 정전협정으로 어정쩡하게 유지돼온 65년짜리 휴전체제가 허물어지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맺어질 듯한 분위기였다. 넷째,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으로 불거진 25년짜리 북핵문제가 풀리는 듯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반도에 금세 평화가 정착되고 머지않아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았다.

그러나 2019년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한반도 안팎에 불안과 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크게 다섯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북한과 미국 사이에 2월 하노이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10월 스톡홀름 실무회담도 결렬되면서 2017년 말 폭탄을 주고받은 때처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남한과 북한 사이엔, 북미관계 교착에 따라,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셋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 무역전쟁을 비롯한 패권경쟁이 격렬해지면서 한국이 몹시 곤란한 처지에 빠져들고 있다. 넷째, 한국과 일본 사이엔 역사와 영토 문제에서 무역과 군사 문제로까지 갈등과

* 現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 교수
미국 University of hawaii at Moana 정치학 박사

분쟁이 상존할 모양이다. 다섯째, 한국과 미국 사이에 주한미군 유지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2. 북미관계 교착

1950년 일어난 한국전쟁을 69년이 지나도록 끝내지 못하고, 1953년 들어선 정전협정을 66년이 흐르도록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은 북미 적대관계 때문이다. 전쟁 주요당사국인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1979년, 남한과 중국은 1992년 국교를 정상화했다. 남한과 북한은 1991년부터 2018년까지 다양한 협정과 정상회담 등으로 적대관계를 종식했다. 북한과 미국만 수교하지 못하고 있다.

북미 사이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은 주한미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냉전이 종식되면서 주한미군의 실질적 역할이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북한과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으면 주한미군을 유지할 법적 근거나 정치적 명분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중국을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하고,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미루어야 하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2018년 6월 제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자 2019년 2월 제2차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그게 결렬되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문제의 핵심은 '북핵문제'다. 북한 비핵화의 내용과 절차 그리고 미국의 상응 조치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두 사람 서로의 필요성 때문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협상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얻고 싶은 듯하다. 노벨평화상을 받고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다.

첫째, 트럼프는 2018년부터 노벨평화상을 받기 원했다. 얼마나 평화상을 원하면 체면 사납게 아베 일본총리에게까지 자신을 후보로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겠는가. 2019년까지는 실패했다. 1950년 일어나고 1953년 중단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면 된다. 무려 70년짜리 전쟁을 끝내는 것은 노벨평화상감으로 충분하다. 2020년 10월 수상자

로 발표되면 11월 대통령 재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통령 재선을 원한다. 언제든 미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경제다. 먹고사는 문제가 후보 선택의 제1 결정요인이라 말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집권 이후 2019년 12월 현재까지 미국 경제는 괜찮은 편이다. 그가 큰소리치는 대로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려면 이른바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경제업적에 안보성과를 덧붙여야 백악관에 다시 들어가는 길이 더 넓어진다는 뜻이다. 안보성과를 가장 얻기 쉬운 곳이 한반도다. 앞에서 얘기했듯,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북핵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이다.

한편, 2019년 12월 현재 트럼프 탄핵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실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선 탄핵안이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었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김정은 역시 트럼프와 협상을 통해 꼭 얻고자 하는 게 있다. 우선 미국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원한다. 북한은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목표연도 2020년까지 성과를 내야 한다. 게다가 2017년 9월 수소폭탄 시험 및 11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2018년 4월 '경제건설 총력집중' 정책을 선언했다. 미국이든 남한이든 북한을 침공할 수 없도록 군사건설을 끝냈으니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적대관계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풀 수 없고,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협력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재가 풀리면 미국이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북한에 싼 이자로 투자가 들어가고, 일본의 식민통치 보상이나 배상금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서로를 필요하면서도 쉽게 협상에 나서지 않는 것은 협상전략 때문이라 생각한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기에 자신은 될수록 적게 주고 상대방부터 가능한 많이 받기를 원한다. 트럼프는 회담을 취소하거나 뒤엎는 등 '미친놈'처럼 굴며 상대의 양보나 굴복을 받아내는 '미치광이 협상술(madman theory)'을 구사한다. 김정은은 수시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대를 '벼랑끝'으로 몰고 가며 양보나 굴

복을 받아내는 '벼랑끝 협상술 (brinkmanship)'을 펼친다. 서로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해 상대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 둘 다 2020년까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머지않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트럼프는 아무리 늦어도 11월 선거 이전에 성과를 얻어야 하지만, 김정은은 국가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정해진 임기가 없다. 트럼프가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로, 남한에는 '북핵문제' 또는 '비핵화'에 관해 오해나 왜곡이 적지 않다. 남한-북한-미국 사이에 논의된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위협'과 '북한의 핵무기'가 함께 없어지는 상태다. 북한 핵무기의 완전 폐기를 원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해야 하고, 주한미군 유지를 원하면 북한 핵무기 보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3. 남북관계 후퇴

2018년 9월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은 매우 뜻깊었다.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종전'을 이루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3년간 치렀던 한국전쟁을 65년 동안 어정쩡하게 멈추거나 (정전, 停戰) 쉬고 있는 (휴전, 休戰) 비정상에서 벗어나 완전히 끝내자고 (종전, 終戰)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2019년 12월 현재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첫째, 군사적 적대관계를 끝내기로 했지만, 남한은 국방비를 크게 늘리며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 수십 대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2019년 거의 매달 한두 번 미사일이나 대포를 쏘아 올렸다. 둘째, 남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며 서해 경제공동특구와 동해 관광공동특구를 추진하는 등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키기로 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곧 열고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준비모임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넷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남한을 향해 조롱과 비난만 보내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체나 후퇴는 남한 탓이 크다. 남한은 북한이 2019년 미사일을 비롯한

새로운 무기 시험발사를 10번 이상 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고 비난하지만, 먼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며 약속을 지키지 못한 쪽은 남한이다. 남한은 1990년대부터 적어도 20년 이상 최소한 10배 이상 북한보다 군사비를 더 많이 써왔으면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미국의 첨단무기를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다. 해마다 미국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여온 가운데 2019년 까지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있다. 남북 사이에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의 허락을 받지 못해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미국의 눈치만 볼 뿐이다. 미국의 동의나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과 약속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을 적대시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군사비를 크게 늘리며 미국의 첨단 전투기를 많이 도입하는 것은 남한이 1970년대부터 추구해온 자주국방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미국이 갖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돌려받아야 하고,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한의 군비증강을 북한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북한의 군사비는 기껏해야 남한의 1/10 수준이고 많아야 미국의 1/100도 되지 않는다. 러시아나 중국에서 첨단무기를 들여오지도 못한다. 러시아나 중국과 단 한 번도 합동군사훈련을 벌이지 않는다. 남한의 군비증강과 한미군사훈련에 맞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핵무기와 미사일 시험 '도발' 밖에 없지 않은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철도와 도로 연결은 커녕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조차 하지 못하는 남한에 대한 실망과 좌절이 조롱과 비난 그리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맞물려 진전되는 구조다. 남한은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 사이에 끼어있기도 하다. 북미관계가 진전되면 남한은 뒤따라가면 되지만, 정체되면 앞장서 이끌어야 하는데 쉽지 않다. 북한과 평화공존 및 통일을 추구하며 화해협력을 진전시키려면 미국으로부터 동맹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압력을 받기 마련이고,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공조'를 중시하면 북한으로부터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앞세우라는 비판을 받기 쉽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2016년 폐쇄된 개성공단 재개는 절실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북한경제를 어렵게 만들기 전에 남한의 영세사업 인들과 중소기업인들부터 피해가 몹시 크기 때문이다. 특히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보다 남한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남한의 중소기업인들이 개성 말고 이 세상 어디에서 평당 15만원 이하의 공장부지를 얻어 월급 15만원도 되지 않는 노동력을 구할 수 있겠는가. 개성공단은 북한에 '퍼주는' 곳이라기보다 북한으로부터 '퍼오는' 곳이다.

4. 미중경쟁 격화

중국은 1978년부터 개혁개방을 실시하며, 1992년 '사회주의 시장경제' 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2001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했다. 1978-2018년 40년간 연평균 10%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배경과 과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경제를 주도해온 'G7' 국가들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을 2000년대에 따라잡았다. 2010년 일본을 추월하자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주도한다는 뜻의 'G2'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 국내총생산 (GDP)을 시장환율 (MER)이 아닌 구매력평가지수 (PPP)로 계산하면 2014년 미국까지 추월하고 세계 제1경제대국이 되었다. 이에 앞서 2009년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제1수출대국이 되고, 2012년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무역대국이 되었다.

중국은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국방비를 크게 늘려왔다. 2000년대부터 경제성장률을 웃도는 연평균 12%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0년부터는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군사강국들보다 두 배 이상의 군비를 지출하고 있다. 미국에 맞서 해양전력을 본격적으로 증강시키며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개입을 무력화하는 작전을 세워놓았다. '접근반대 및 지역거부 (反介入/区域拒止)' 전략으로, 중국과 가까운 바다에서는 미국함대의 접근을 막고, 조금 더 먼 바다에서는 미국함대의 작전을 방해하겠다는 내용이다.

중국공산당은 2017년 10월 두 가지 커다란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는 '소강 (小康) 사회'를 이루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모든 인민이 함께 부강해지

는 '대동 (大同) 사회'로 나아간다는 내용이다. 육로와 바닷길로 각각 세계를 연결한다는 야심찬 '일대일로 (一帶一路)' 정책을 바탕으로 세계 제1국가가 되는 '중국의 꿈 (中國夢)'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에 대해 1990년대 초 냉전종식 직후부터 견제와 봉쇄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경쟁 국가인 일본을 활용했다. 1996년 일본과 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있는 '평화헌법'을 수정해 '정상국가'가 되도록 촉구하면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도록 지원했다. 2015년엔 일본과의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엔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협정과 2016년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GSOMIA)이 맺어지고, 고고도미사일방어망 (THAAD) 한국 배치가 발표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NSS) 핵심 내용은 미국이 "일본과 호주 그리고 인도와 4각협력을 증진시켜" 중국을 봉쇄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이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때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 견제와 봉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했던 '아시아 회귀 (pivot to Asia)' 또는 '아시아 재균형 (Asia rebalancing)' 전략을 조금 수정한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며 압박하는 데는 경제적 배경이 크다. 중국에게 1년 평균 3,500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기 때문이다. 참고로, 미국은 최근 5년간 일본에겐 연평균 700억 달러, 한국에겐 200억 달러 정도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맹국이라는 일본과 한국에도 압박을 가하며 자유무역협정 (FTA)을 다시 협상하자고 했던 터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두 강대국 사이의 마찰과 분쟁이 그치지 어렵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제3자는 한국이다. 한국이 기술을 바탕으로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면, 중국은 값싼 노동력으로 마무리한 완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제1 수출대상국이고, 미국은 제2 수출대상국이기도 하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뿐만 아니라 기술,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패권경쟁을 벌

이고 있다. 미중 패권경쟁은 한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유일한 군사동맹이요,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과의 협력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을 만들어보라는 모순 섞인 억지외교와 같다. 국제관계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금언을 유념하며, '중립 외교'나 '등거리 외교' 또는 '양다리 걸치기'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 미국을 편들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중국 편에 서기도 하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을 걷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5. 한일분쟁 확산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그리고 2017년 대선공약에 따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2015년 맺어진 위안부협정을 2018년 사실상 파기했다. 대법원은 일제에 징용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2018년 판결했다. 아베 일본총리는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만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등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7월부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한국에 수출규제를 비롯한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한국은 민간 차원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고, 정부 차원에서선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협정(GSOMIA)을 끝내겠다고 맞섰다. 한일갈등이 역사문제와 영토문제에서 경제문제와 군사문제로까지 확산된 것이다. 미국의 중재와 압력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결정을 미루고 일본은 수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2019년 12월 현재 한일 간의 마찰이 일시적으로 잠복하는 듯하지만, 갈등과 분쟁은 언제든 다시 불거지고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 배경과 과정을 짚어본다.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냉전이 심화하자 미국은 일본과 1951년 안보조약을 맺었다. 1941-45년 일본과 전쟁을 벌일 때는 소련과 연합했지만, 1947년부터 소련과 냉전을 치르면서는 일본과 손잡게 된 것이다. 미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고 한국까지 끌어들이려 했지만, 한국은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난 지 겨우 6년이 지난 때여서 일본과의 적대관계를 풀기 어려웠다. 미국이 1951년부터 한일협상을 주선하고 개입하며 압력을 행사했지만 이승만의 완고한 반일정책에 막혔다.

이승만이 1960년 사월혁명으로 쫓겨나고 일본군 출신 박정희가 1961년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자, 미국은 1962년부터 한일협정을 "미국정부의 최고 관심사" 또는 "가장 급선무"로 삼고 한국과 일본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박정희 정부는 협상에 적극 응했지만 야당과 대학생들의 저항과 반발이 몹시 컸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65년 타결된 한일협정은 야당과 대학생들의 주장대로 몹시 "민족 반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인 것이었다.

첫째, 일본이 35년간의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나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국에 유상과 무상채권을 포함해 모두 8억 달러를 건넸는데,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 및 '경제 협력' 명목이었다. 아직도 일본의 식민통치가 한국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한국의 정치인, 언론인, 학자들이 적지 않은데, 당시 일본 정치인들이야 오죽했겠는가.

둘째, 독도 영유권, 징용자, 위안부, 원폭 피해자, 약탈 문화재 등에 관한 문제를 모두 덮어버렸다. 독도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징용자와 위안부 문제 등이 최근 다시 불거지게 된 배경이다.

한일협정이 맺어진 1965년 이후 50년이 흐른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아베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위안부 협정을 맺었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처럼 일본의 사과는 전혀 없었고, 일본이 10억엔(약 100억원)을 건네기로 했는데, 배상이나 보상 명목이 아니라 '인도적 지원' 명목이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위안부 문제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되돌릴 수 없이 해결한다고 선언하고, 앞으로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이를 빌미로 비난이나 비판을 자제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반세기여가 흐른 뒤에 이렇게 또다시 "민족 반역적이고 굴욕적이며 졸속적"인 한일협정이 되풀이된 것은 여전히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다. 급속도로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2015년 일본과 방위협력지침을 다시 개정하고 2016년 일본 안보법제를 개정하도록 이끌며 미일동맹을 강화하자, 중국은 러시아와 손잡고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배경과 과정에서 미 50% 정도 인상으로 합의하기 쉽다. 한꺼번에 500% 증액하라고 압박하면 줄다리기가 200-300% 인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트럼프의 노림수 아닐까. 이

에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보다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역할과 임무를 맡고 있으니 미국이 기지 사용료까지 내며 머물든지 아니면 철수하라”고 맞서는 한국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관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냉전시대에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보수/극우 세력은 탈냉전시대에도 여전히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 유지를 국가 ‘목표’처럼 간주한다. 한미동맹이 약화하거나 흔들릴까봐 북한과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는 한 국회의원의 반민족적이고 반평화적인 망언까지 들린다.

이제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 발상의 전환도 좋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북한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언제까지 필요할까?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남북 사이에 더 이상 전쟁을 없앨 것이라고 한 터에 북한을 겨냥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왜 언제까지 필요할지 의문이다.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라면 필요하고 바람직할까?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1992년 국교정상화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한중 교역량은 2003년부터 한일 교역량을 넘어섰고, 2004년부터는 한미 교역량을 초과했다. 2009년부터는 한미 및 한일 교역량을 합친 것보다 많아졌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내용이다. 일본에겐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단 한 해도 흑자를 기록해본 적이 없는 가운데 2018년 250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미국에겐 1982년부터 흑자를 기록하면서 2018년 140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에겐 수교 다음해인 199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온 가운데 2018년 540억 달러의 흑자를 보았다. 세계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인 한국의 전체 교역량 가운데 1/4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전체 무역흑자 가운데 60% 이상을 중국에서 거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해 한국이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게다가 미국과 중국은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군사정책을 전개하고 중국은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는 군사정책으로 맞서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중국의 제1폭격 지역과 대상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이 되지 않겠는가. 주한미군 때문에 한국이 전쟁터로 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 약화나 해체 또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로 한국의 안보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동북아시아나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는 2000년대 초부터 추진되었지만, 미국의 견제와 반대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이 보장하는 한반도 중립화를 구상해볼 수도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하면서 구상한 정책이기도 하다.

한국과 일본의 공존을 위한 외교전략

박영준*

1. 한일관계 악화와 그 여파

최근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악화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에서 합의되었던 일련의 대일정책을 수정하는 조치가 진행된 것이 그 발단의 하나라고 여겨진다.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증 결과 당시 합의가 피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졸속 합의였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일본 정부의 기금 거출에 의해 결성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11월, 해산되었다. 같은 시기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가하기로 예정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옥일기(旭日旗)를 게양할 것이라는 소식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 함정의 참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아가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은 일제 강점기 일본 기업에 징용되어 강제노동을 당한 징용공 피해자들에 대해 미츠비시 중공업이나 신일철 등 일본 기업들이 1인당 1억원 정도의 피해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대일정책 수정은 한국 사회의 높아진 인권의식 혹은 일본에 대한 민족주의적 정서의 고양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같은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과거 한일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되어온 전제들을 뒤엎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다.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은 2015년 11월, 당시 양국의 외교당국이 어렵사리 합의한 위안부 해결 방안을 뒤엎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일본 정부의 기금 거출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산한 것도 당시 양국간 합의사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제주

국제관함식에 옥일기를 게양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의 참석 불허 결정도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강제징용공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양국 국교정상화 당시에 합의되었던 바, 일본이 지불하도록 된 청구권 자금 안에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양국 간의 암묵적 전제를 뒤집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인식에 따라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국”의 레테르를 붙이면서, 다각적으로 비판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아베 신조 수상은 취임 초기에 시정방침연설 등을 통해 사용해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해 온 한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 시작했고, 2018년 12월에 일본 정부가 공표해 온 안보전략서인 「방위계획대강」에서는 2013년의 그것과 달리 안보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을 미국,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의 후순위로 재배치시켰다.(國家安全保障會議 및 閣議, 『平成31年度以後に關する防衛計劃の大綱』 2018.12.18.). 나아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 일종의 경제보복 카드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7월, 일본은 반도체 관련 3가지 품목에 대한 대한 수출 규제조치를 내렸고, 8월에는 한국이 전략물자의 수출입 관리제도에서 불비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수출우대제도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마저 결정했다. 이 결과 한국은 종전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그룹 A수준에서 우대받던 일본의 무역우대 대상국에서 브라질, 터키, 우크라이나 등과 같은 그룹 B 수준으로 격하되게 되었다. (『朝日新聞』2019.8.28.)

일본이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사용한 것은 한국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전략물자의 수출입 통제를 관리하는 핵공급국 그룹, MTCR, NPT, CTBT 등의 국제레짐에 가장 열심히 참가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전략물자 수출입 관리 레짐에 그 평가를 공동의뢰하자고 제기한 것이나, WTO에 일본을 제소하려 했던 것은 당연한 대응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더 나아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안보적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6년에 체결된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물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미국의 강력한 이의 제기에 따라 2019

* 現 국방대학교 안보보장대학원 교수
일본 동경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

년 11월, 일본이 무역규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에 응한다는 전제 하에 한국이 조건부로 종료 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된 상태이기는 하다.

그러나 역사문제로 촉발된 양국간 갈등관계가 경제 및 안보문제로 확산되면서, 양국 관계는 국교정상화 이래 최악의 상태를 노정하게 되었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대한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나 일본 여행 자제의 움직임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10월 현재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자는 전년 동월 대비 65%나 감소하였다. 반도체 관련 물품 및 기타 전략물자의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인해 일본의 대한국 수출도 2019년 10월 시점에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하였다.(『朝日新聞』2019.11.21.) 한국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한일 관계 악화에 따라 양국 경제에 악영향이 파급되면서 2019년 7월과 8월간 일본 경제에는 여행 수지 등의 감소에 따른 손실액이 3537억원에 달하고, 한국 경제에도 4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였다.(『朝日新聞』2019.10.8.)

물론 한국과 일본은 양국 무역관련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였고, 12월24일과 25일에는 중국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써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상된 양국 관계는 쉽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

2. 동아시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

한일 양국관계의 악화는 경제적 손실만 결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는 동북아 안보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안보태세에도 부담을 더해주고 있다. 동북아 안보태세의 불확실성이란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의 심화, 그리고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부족으로 요약될 수 있다.

1) 미중 전략적 대립 심화

2010년을 기점으로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항모, 전략폭격기, 미사일 등의 첨단 군사전력을 증강하면서, 그 군사활동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던 남중국해의 전 해역을 소위 구단선(nine dash line)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전통적으로 자국의 영유권이었다고 하는 주

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 해역에 소재한 파라셀 제도나 스프라틀리 제도의 도서들에 활주로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H6K 전략폭격기들을 착륙시키는 등의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육상으로는 중앙아시아를 경유하여 유럽에 이르는 통로를, 그리고 해상으로는 중국 남부에서 남중국해와 인도양을 경유하여, 수에즈 운하를 지나 유럽 남부의 그리이스에 이르는 항로에 대해 인프라 투자 등을 실시하며, 자국의 통상 확대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도 강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들에 대해 경제지원과 아울러 항만 건조 등을 실시하고 있고, 아프리카 및 북극해 연안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자본 투자 등을 실시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군사적으로 시진핑 정부는 2019년 7월에 공표한 국방백서를 통해, 미국의 일방주의적 강화를 국제질서 상 안보위협요인으로 지적하면서, 중국은 2020년까지 국방의 기계화를, 2035년까지 국방과 군사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2050년에 이르러서는 세계 클래스의 군대를 이룩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제시한 바 있다.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ina's National Defense in the New Era, July 2019)

중국의 이같은 동향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 공표한 안보전략서들을 통해 이를 잠재적 위협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이 2017년 12월 공표한 국가안보전략서는 중국을 러시아와 더불어 미국에 도전하는 수정주의적 세력(revisionist power)로 규정하면서, 미국의 군사력 증대로 이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The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ecember 2017). 이같은 전략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1월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표하면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등 4개국과 군사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하와이에 기지를 둔 종전의 미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였고, 미

국방성은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공표하여 보다 구체적인 전력증강의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 문서는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보다 공세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자체적으로는 함모와 잠수함, 그리고 제5세대 전투기 등의 전력을 증강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그리고 타이완 등 동맹 및 우방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The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June 1, 2019)

사실 미국 내에서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의 논쟁이 2010년대 이후 주요 전략가와 지식인들 간에 전개되어 온 바가 있다. 헨리 키신저나 조셉 나이,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등 원로급 지식인들은 중국과의 공진화(co-evolution) 혹은 태평양 공동체 구상 등을 제기하며, 협력적 공존을 주장해온 바 있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역사상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에 따라 나타났던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의 사례이며, 양국간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한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엘리슨도 미중 협력론자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레이엄 엘리슨, 『예정된 전쟁』, 세종서적, 2018)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미중 협력론자들보다는 미중 대결론을 주장한 전략가들의 구상에 따라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전략에 기만당해 왔으며, 결국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대체하려는 100년간의 마라톤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단호한 대중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마이클 필즈버리 같은 전략가의 의견이 중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Michael Pillsbury, The Hundred-Year Marathon: China's Secret Strategy to Replace America as the Global Superpower, New York: St. Martin's Griffin, 2015)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18년 10월 4일, 필즈버리 박사가 재직하는 허드슨 연구소를 찾아가 연설하면서, 필즈버리 박사의 대중국관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중 강경론의 정책방향을 역설한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서로 충돌하고,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한국은 구조적인 안보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으로서는 동맹국 미국의 세계전략에 동참해야 하나, 한편으로는 제1의 무역대상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도외시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를 목전에 두고 한국이 일본과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킨다면, 그 자체로 부담이 커질 뿐 아니라, 동맹국 미국과의 관계마저도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중간 전략적 경쟁 심화의 국면에서 한일간 갈등과 대립 심화는 우리의 외교정책에서 가능한한 회피되어야 한다.

2)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부족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요인은 북한 대외정책의 불확실성이다. 2018년 남북한은 4월의 판문점과 9월 평양에서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들에 적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외에 북한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가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역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 2월,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개최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후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 비핵화의 약속과는 동떨어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십여차례 이상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무기의 운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시 폐쇄된 북한 핵시설들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징후도 감지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싱가포르와 판문점, 그리고 하노이에서 가진 정상회담에 따라 조성되었던 북미 간의 유화무드도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12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해 필요하다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은 12월 4일 발표한 담화를 통해 자국이 보유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 만의 특권이 아니며,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북한도 상응 행동을 할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물론 북미 간의 관계 악화가 양측간 재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18년에 개최된 일련의 회담에서 각각 한국과 미

국 정상에게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의 공약이 무산되고 있는 징후가 농후하게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더해 미국 국내정치 어려움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에 대해 종전과 같은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미 간의 관계 개선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렇다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미간의 중재역할을 하거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비전을 추진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북한 문제의 악화 속에서 전통적인 우방이 되어야 할 한일관계 악화가 가중된다면, 우리의 안보와 외교정책에 큰 부담이 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한일관계 악화는 회피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서술한 이유들 때문에 한일관계 악화는 경제적 손실 이외에 외교나 안보적으로도 한국의 국가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상으로 부상한 한국이 외교나 안보정책 관점에서 미중관계의 악화 방지,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비핵화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데, 한일관계 악화에 따른 대일 외교전에 그 역량을 소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한일 공존과 동북아 평화질서 구축의 길

1) 한일간 외교협력이 필요한 이유

건국 이래 한국이 내외의 위기요인들에 직면해 가면서도 나름의 안보와 번영을 유지해온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안보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우리 자신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국방 정책, 둘째, 세계 최강국 미국과의 동맹 체계를 통한 안보태세 보강, 셋째, 북한에 대한 억제능력 확보 및 대화 병행, 넷째,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의 다자적 안보협력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이같은 4가지 안보정책의 기축들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이다. 첫째, 일본과의 안보협력 증진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결과한다. 한미동맹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배치된 주일미군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그런데 일본의 자위대는 미일동맹 하에서 주일미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한일 안보협력은 결과적으로 미일동맹의 능력과 역할을 한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가시키게 된다. 둘째, 한일관계의 발전은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의 정상국가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적인 도달점은 북미간 관계 정상화 및 북미간 관계 정상화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은 2002년 당시의 고이즈미 수상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평양 정상회담에서 국교정상화가 될 경우 일본이 경제지원을 대북 확대한다는 약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정상국가화 도정에서 일본의 역할이 기대되는 것인데, 만일 한일 간에 협력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이러한 일본의 잠재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이래 아베 수상은 최근까지도 북한과의 정상회담 개최에 강한 의욕을 보여 왔는데, 북일 관계가 양호하게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순기능을 하게 하려면, 한일간 전략적 협력이 불가결하다. 셋째, 한일 협력은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 즉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참가하게 될 다자간 안보협력 질서 구축에 불가결하다. 이들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가능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 추진되었던 6자회담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물론 이 때 합의되었던 2005년의 9.19 합의나 2007년의 2.14 합의가 결국 무산되면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 구축 논의도 탄력을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이익을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 간에 다자적 신뢰구축이나 안보협력의 틀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있고,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특히 우리에게겐 중요하다.

2)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한 한일 협력 방향

문제인 대통령은 2019년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국이 지향해야 할 3가지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고 동아시아의 평등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책임있는 경제강국, 둘째,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 셋째,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의 국가 등이 그것이다. 즉 남북한이 평화체제를 이룩하고, 이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면서, 자유무역의 질서 하에 상호 협력을 추진하는 교량국가 및 경제강국의 국가구상

을 제시한 것이다.

이같은 국가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역내 어떤 국가와도 불필요하게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역이 되어서 안될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하듯이 역내 국가들과도 갈등과 대립 요인을 최소화하고, 상호협력과 이해 심화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교량국가로서의 책무가 아닐까 한다. 이를 한일관계에 국한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안보적으로는 한미일 정책공조의 틀 속에서 일본과 최근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안보협력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한국이 참가하는 의향을 보임으로써, 이를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 재개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2019년 11월 우리 외교부는 미국 국무부와 사이에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간 협력 증진에 노력하는 한미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양국 간에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앙일보』2019.11.4.). 이로써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고 있는 일본 등과도 한국이 비전통적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었다. 이같은 정책 방향 속에 한국과 일본은 동해 상에서의 북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공동의 정보 교환, 남중국해 상에서의 항행 안전에 대한 협력 등을 재개함으로써 지역내의 안전과 평화 질서 구축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중국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님을 한국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일본이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가하면서도, 이것이 중국에 대한 군사적 봉쇄망의 형성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면서 중국과 정상회담도 자주 갖고, 군사적으로도 협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특히 한국으로서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12월에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 및 이를 뒷받침하는 한중일 협력사무국의 3국간 협력프로젝트를 한미일 안보협력과 병행하여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한중일 3국 간에는 3국간 FTA 체결 및 환경협력, 사회문화 분야 협

력 등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들이 많다. 이러한 정책어젠다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중국과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도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증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일간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양자간 현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결정 사항에 대해 행정부가 관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배상 책임을 강요한다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양국 간에 암묵적으로 합의되어온 전제, 즉 청구권 자금 가운데 개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었다는 전제를 우리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릴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 기업이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는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대신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위안부나 강제징용공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의해 발생한 피해자들에게 성실히 사과하도록 요구하면 어떨까 한다. 이 경우 우리는 금전적으로 이득을 챙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국간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보편적 정의를 준수하고 있다는 국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다. 이로써 발생하는 무형의 이익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날로 격심하게 전개되고 있고, 북한 비핵화에 관한 전망도 서지 않는 불확실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속에서 국가이익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교량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동맹을 공유하고, 정치적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시장경제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상호 협력 심화를 통해 보다 안정되고 협력적인 지역질서 구축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한 우리 외교의 담대한 전략 추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과 일본의 독도이야기

곽진오*

1. 서론

출생은 신사에 신고하고 결혼은 교회에서 하고 죽어서는 절에 묻힌다는 일본인과 이웃하고 살아가기에는 예나 지금이나 그리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필자에게 사람들은 일본을 더 연구하고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제부터가 우리 머리 한구석에는 일본에 지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 축구는 물론 야구 심지어는 팔씨름 그리고 가위바위보까지도 일본에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세기 전만해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일본을 상대로 이기고 지는 것 보다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본의 발달된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렇다보니 당시에는 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 이질감은 있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반일행동도 정부의 눈치를 봐야했다. 지금과 같은 '경쟁과 협력의 한일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2년 한일월드컵공동개최 이후부터가 아닌가한다. 이유는 1990년 일본경제에 거품이 꺼지면서 그동안 완만한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제성장을 자랑하던 일본경제는 몇 십년동안 침체되어있다.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보다는 일본이 호황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상대적일뿐 일본경제가 침체기라는 것을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최근 30년간 한일 간의 GDP격차를 비교해 보면, 1988년 15.6배에서 현재는 3.1배로 축소되었고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으로 한국이 3만1362불(세계27위), 일본이 3만9286불(세계24위)이었다. 그러나 1988년 한일 1인당 GDP를 비교해 보니 한국은 4천460불, 일본은 2만4770불이었다. 단순히 비교해보더라도 이제 한일이 경

* 現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영국 University of Hull 정치학 박사

제와 관련해서는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경제처럼 한일 간에 격차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반면에 과거사를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일본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과거사문제는 오히려 한일 간의 인식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현재 한일 간에 대립이 거듭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독도 영토주권을 시작으로 동해 표기 명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강제동원 문제, 일본 교과서의 한국 관련 왜곡문제,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문제 등이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중에서 독도는 일본이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다. 필자가 독도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어릴 적 TV 코미디 프로이다. 늦은 밤 골목길에서 여성이 강도에게 쫓기면서 '살려 주세요,' '강도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골목 창에 켜져 있던 불이 모두 꺼지더니, 여성이 지혜를 발휘해서 갑자기 '이 사람이 독도가 일본 땅이래요'라고 소리치자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우르르 몰려나와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강도를 잡던 내용이었다. 그때 나는 어린 나이여서 독도가 무엇이 길래 사람들이 저리도 분괴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독도와 나의 첫 만남은 TV 코미디프로였다. 그리고 독도를 연구하면서 독도에 처음 입도 했을 때는 감회가 남달랐다. 요즘은 연간 20명이상이 독도를 방문한다. 강원도 또는 경상북도에서 배를 타고 서너 시간 동쪽으로 가다보면 울릉도가 나온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배로 두 시간 더 동쪽으로 가면 우리 땅 독도에 이른다.

2. 한국의 독도역사

서양에서는 역사시간을 수면제와 비교하곤 한다. 그만큼 역사수업은 지루하다? 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독도역사를 공부하다보면 지루할 시간이 없다 왜냐면 독도가 우리나라의 역사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가늠해 보는 이정표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독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독도는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병탄되기 5년 전인 1905년에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이른바 '시마네현 고시 40호'에 근거해서 독도가 임자 없는 땅이라는 주장과 근거를 내세워 독도를 일본영토로 강제 편입했다. 이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독도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른다. 대나무가 없는 독도를 일본이 대나무

섬(다케시마)으로 부르는 이유는 1905년 독도를 새로운 이름 '다케시마'로 붙여 넣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울릉도(鬱陵島)를 다케시마로 불렀고 독도는 마쓰시마(松島)로 불렀다.

1) 삼국사기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할 수 있는 근거는 많지만 여기에서는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한다. 고대로부터 독도가 우리나라의 고유영토 이었다는 근거는 『삼국사기』(1145) (고려 인종 23), 김부식(1075~1151)이 백제, 신라, 고구려 3국의 정치적 흥망과 변천사를 기술한 역사서『삼국사기』이다. 이 역사서에 신라와 울릉도에 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증왕 13년(512)년에 하슬라주(지금의 강릉 지역)의 군주인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삼국사기에서 얘기하는 당시 우산국의 위치와 지형은, 우산국은 명주(지금의 강릉지역과 동일)의 정 동쪽 바다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은 사방 100리인데,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울릉도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쉽게 항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사부는 하슬라주 군주가 되어서 말하기를 '우산국 사람들은 어리석고도 사나워서 힘으로 복속시키기는 어려우나 피로는 복속시킬 수 있다.'하여 이에 나무 사자를 많이 만들어서 전함에 나누어 싣고 울릉도 해안에 이르러서는 거짓으로 '너희가 만약 항복하지 않으면 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뱉아 죽이겠다.'고 말하자 울릉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곧 항복하였다고 한다. 이후 지증왕 13년 6월부터 우산국은 신라의 일부가 되었고 우산국은 해마다 신라에 토산품을 바쳤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산국은 이사부에 의해 정복당하기 이전에는 동해상에 존재했던 독립된 세력이었을 수도 있다. 일본은 아직 고대국가가 성립되려면 1세기 반 이상을 더 기다려야 했던 점을 감안 했을 때 우산국은 동해상에서 하나의 독립된 해상세력으로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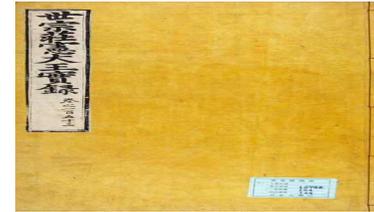
2) 고려사

우산국에 관한 얘기는 『고려사』(1451)에도 나오는데, 우산국은 고려가 세워진 이후

에도 고려의 지배를 받았다. 우산국은 930년(태조 13)이래로 고려에 사신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이에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거나 농기구와 종자 등을 하사하였다. 또한 고려에서는 우산국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관리했다고 적혀있다. 주요 근거는 아래 표와 같다.

시기	내용
930 (태조 13)	우산국에서 고려에 토산물을 바치고, 고려는 이들에게 관직을 주었다.
1018(현종 9)	우산국이 여진족의 침입을 받아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자 농기구와 종자 등을 우산국에 하사하였다.
1032(덕종 1)	울릉도(울릉도) 성주가 고려에 아들을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
1157(의종 11)	강릉지역 관리 김유립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지를 살피게 했다.
1246(고종 33)	왜인들의 침입이 그치지 않자 울릉도에 안무사를 파견하여 섬을 관리하게 하였다.

3) 세종실록지리지



우리가 어려서 익히 들던 가수 정광태의 '독도는 우리땅' 노래 가사에 나오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종실록지리지』(1454)는 독도가 우리의 고유영토라는 사실을 더욱 실감나게 설명하고 있다. 모두 8책으로 전국을 328개의 군현(郡縣)으로 구분해서 인문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세종실록』권 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여기에는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는 별개의 섬이고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인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날씨가 맑으면 울릉도에서 보이는 유일한 섬이 지금의 독도이기에 독도는 오래전부터 강원도 울진현 소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실록지리지』가 발간되고 약 80여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동국여지승람』(1530)이 증보되어 1년 뒤에 『신증동국여지승람』(1531)이 관찰지리지로 편찬되었다. 이 책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있다. 이 책들은 『세종실록지리지』의 내용을 계승하여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도 우산도(독도)와 울릉도가 동

해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독도가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첨부된 『팔도총도』에도 우산도와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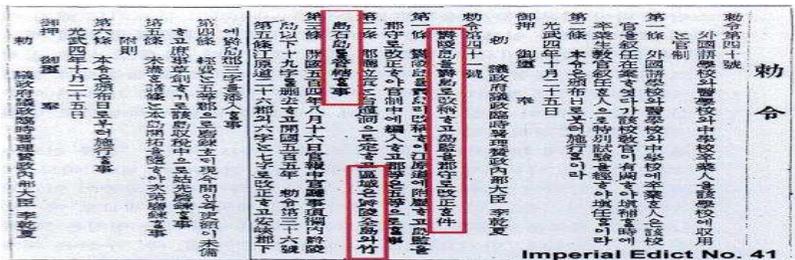
5) 만기요람

『만기요람』(1808)은 국왕이 정사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왕조의 재정관 군정에 관한 내용이『재용편(財用篇)』6권과『군정편(軍政篇)』5권에 실려 있다. 이 책에는 우산군에 울릉도와 우산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고 우산도가 당시 일본인들에 의해 송도(松島)로 불리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이는 곧 독도임이 증명된다.

6) 울릉도 검찰기

1881년 울릉도에 파견 갔던 수토관이 울릉도에 일본인들이 불법으로 들어와서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든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에 고종은 1882년 4월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로 임명하여 울릉도에 대해 그 사정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규원 검찰사는 100여 명의 조사단을 이끌고 울릉도 검찰에 나섰다. 그리고 울릉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과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였다. 이규원은 당시 울릉도 사정을 「울릉도 검찰일기」에 남겼다. 이후 고종은 이규원 으로부터 울릉도 검찰을 보고받고 울릉도에 사람을 보내 개척하게 했다. 울릉도에 우리주민이 정식으로 정착하게 된 시기는 1883년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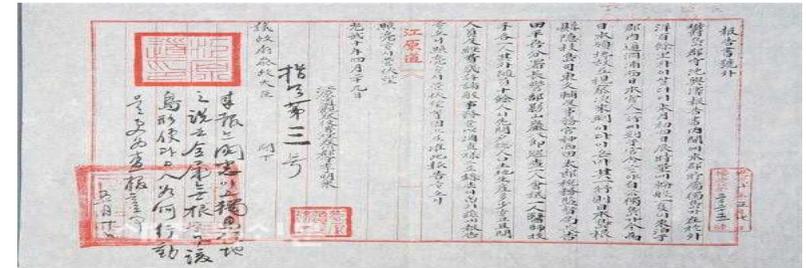
7) 대한제국칙령 41호



『대한제국칙령 41호』(1900) 는 고종37년 10월 25일, 전문 6개조의 울릉도를 울도

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내용은 1900년 10월 27일자 대한제국 관보를 통해 공포되었다. 칙령 2조에는 '군청의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지금의 뱃섬)와 석도(石島, 지금의 독도)를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고종칙령 41호에 나오는 죽도가 독도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석도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죽도는 울릉도에서 약 2km떨어진 곳에 있는 섬으로 울릉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섬을 대섬 또는 뱃섬으로 부르면서 대나무섬을 의미했다. 그래서 고종칙령 41호에 나오는 석도가 독도이며 죽도는 뱃섬이 되는 것이기에 고종칙령 41호는 독도를 석도라는 이름으로 울릉군에 포함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 울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와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 보고서



1906년 3월 시마네현 관리들이 독도를 시찰하러 왔다가 풍랑을 만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울릉도에 들렀다. 이때 심흥택 울도 군수는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약 1년 전인 1905년 2월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에 놀란 심흥택은 이 사실을 강원도 관찰사서리 이명래에게 보고하고 이명래는 이 사실을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알렸다. 이에 대해 참정대신 박제순은 관련 섬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또한 서울에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독도 관련 재조사에 대한 후속보고서는 남아있지 않다.

9)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보도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독도가 일본에 의해서 불법편입 되었을 당시 대한제국정부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서울에는 통감부가 설치된 상태에서 일본에 항의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대한매일신보」(1906년 5월 1일), 「황성신문」(1906년 5월 9일)은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는 '무변불유(無變不有)'라는 제목으로, "울도군수 심흥택씨가 일본관원 일행이 본군(울도/울릉도)에 와서 본군에 소재하는 독도가 일본의 속지라고 하여 땅의 크기와 호구, 그리고 경지수를 기록해 갔다고 내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령하기를 일본관원이 유람 차 와서 땅의 크기와 호구를 기록해 가는 것이 혹여 이상한 일은 아닐지 모르지만 독도가 일본의 속지라 칭하여 운운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이니 지금 보고받은 바가 아연 질색할 일이다"고 했다. 그리고 「황성신문」울취보고내부(鬱倭報告內部)라는 제목으로, "울도군수 심흥택씨가 내부에 본군소속독도가 외양 1백 여러 밖에 있는데 이번 달 4일에 일본관원일행이 관사로 와서 말하기를 독도가 지금은 일본의 영지이므로 시찰차 왔다고 하였는데 그 일행은 일본시마네현 오키도사 히가시분스케 및 사무관 진자이 요시타로와 세무감독 국장 요시다 헤고 분서장, 경부 가게야마 이와하치로와 순사 1명, 회의 1명, 의사 및 기수 각 1명 그 외 수행원 10여명이었는데 가호수, 총인구, 토지생산량과 인원 및 소요경비와 제반 사무에 대해서 조사·기록하여 갔다"고 보도하였다고 한다. 당시 독도가 비록 일본에 의해 강탈당했다 할지라도 한국의 정부문서와 언론은 일본의 불법성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다.

10) 평화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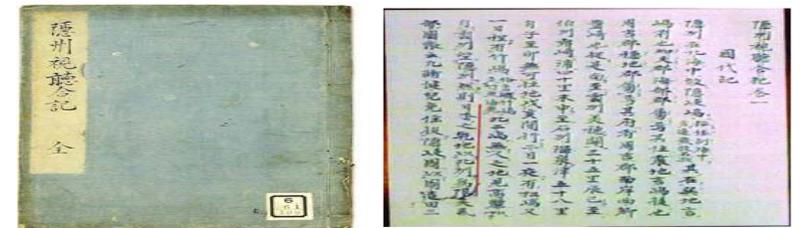
태평양 전쟁이 끝나자 1946년 1월 19일 연합군최고사령부는 SCAPIN677호를 발령해서 독도를 일본으로부터 배제했다. 그리고 1946년 6월 연합군최고사령부는 사령관

각서 제1033호를 발령, 일본의 어업 및 포경업 범위를 제한하고 일본어선의 어로 활동도 금했다. 이후 1952년 1월 18일 한국정부는 「인접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국무원고시 제 14호, 일명평화선 선언)을 공포하였다. 평화선안쪽에 독도가 포함됨으로써 일본의 반발이 예상되었으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로 인해 1945년 9월에 설정되었던 맥아더라인이 폐지되면 한반도 주변에 일본어선이 몰려 올 것을 예상하여 우리나라의 연안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명의로 모두 4개조로 된 평화선 선언을 하게 되었다. 우리정부는 독도를 평화선 내에 둠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한 반면 일본은 평화선이 국제법적으로 불법적인 조치라 비판했다. 그러나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 되면서 평화선의 존재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3. 일본의 독도역사

위에 언급된 다양한 역사사료들은 독도가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의 사료들 역시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사료들 중에는 은주시청합기,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돗토리 번 답변서와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조선국교재시말내담서, 태정관지령, 기죽도약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등이 있다. 이 문서들 중에는 독도가 일본과 무관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일본의 입장이 궁극적이다.

1) 은주시청합기



『隨州視聽合記』(卷1), 國代記部: "隨州在北海中 故云隨破島……戊亥間 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俗言磯竹島 多竹瀝海虎 按神書所謂五十猛嶼 此二島無人之地 見高麗如自雲州望隨州 故日本之乾地 以北州爲限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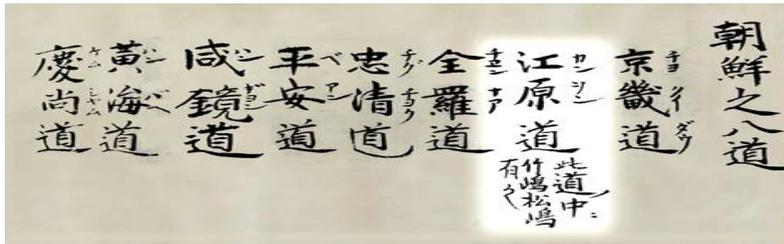
이 자료는 일본의 지방관리가 1667년에 일본의 가장 서북쪽에 위치한 오키섬을 돌

러본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오키섬의 역사, 지리 등을 상세히 기록한 책이다. 이 책에는 일본사료 중 최초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세종실록지리지보다 213년 뒤적이다. 이 책에 나오는 울릉도와 독도 얘기는 '일본의 서쪽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적고 있다. 이는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가 일본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돛토리 번 답변서와 죽도(울릉도) 도해 금지령

이 문서는 안용복과 관련 있는 내용인데, 1693년 울릉도에서 불법어업을 하던 일본어민들에게 안용복이 조선의 바다에서 나가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어부들에게 납치당한다. 이를 계기로 한일 간에는 울릉도를 두고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한국에서는 '울릉도 쟁계' 일본에서는 '죽도(울릉도)일건'이라 부른다. 이른바 '안용복사건'이 발생하자 1695년 일본 도쿠가와 막부는 돛토리번에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서 사정을 물었다. 이에 돛토리번은 울릉도와 독도는 돛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당시 돛토리번은 조선에서 송도(독도)까지의 거리가 80~90리(里), 송도에서 죽도(울릉도)까지의 거리가 40리인데 오키섬에서 송도까지의 거리는 80리라는 사실도 언급했다. 결국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일본인들을 동해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내려 일본어민들의 울릉도와 독도 도해를 금지하였다.

3) 안용복의 공술,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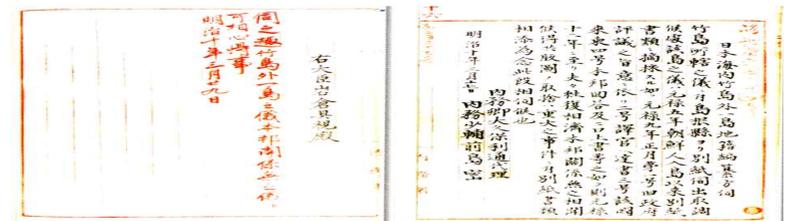
「원록구병자년 조선주착안 일권지각서」(1696), 는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 갔을 때 오키섬의 관리가 안용복을 조사하면서 작성했던 문서이다. 이 문서는 2005년 오키섬의 가와카미 서고에서 발견되었는데 안용복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한 내용을 오키섬의 관리가 받아서 적어 놓은 것이다. 문서내용은 '조선팔도지도' 강원도 부분을 보면 '강원도 안에 죽도(울릉도), 송도(독도)가 있

다.'로 기록되어 있다.

4) 조선국교재시말내탐서

메이지시대가 시작되자 일본은 근대국가로 발 빠르게 이행할 준비를 서두른다. 왕당파가 막부에 압승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신감은 주변국가와의 국경확정을 위한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메이지시대가 시작된 이듬해인 1869년 일본외무성은 관리 세 명을 강원도 일대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어느 나라 영토인지를 조사케 했다. 이후 외무성 관리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이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보고서 이름이 「조선국교재시말내탐서」이고 이보고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가 된 사정을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1930년대에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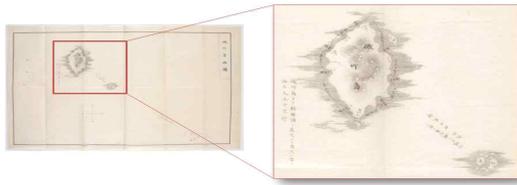
5) 태정관 지령



메이지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1877년에 내무성에 하달한 지령으로 일본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인정한 문서이다. 1876년 10월 시마네현이 관내의 지적(地籍)을 조사하여 지도를 편찬하던 중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내무성에 의견을 물었다. 1877년 3월 내무성은 '이 문제는 17세기에 끝난 문제이어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내무성은 이문제가 일본의 영역과 관련 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당시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 최종결정을 넘겼다. 1877년 3월 29일 태정관은 이 질의서를 검토한 후 17세기말 도쿠가와 막부가 내린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 등을 근거로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무성에 하달했다.

6) 기죽도 약도

일본 내무성은 1877년 3월 최고행정기관인 '죽도(울릉도)의 1도'를 지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 했고, 태정관은 두 섬이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공식문서



로 답했다. 그런데 ‘죽도 (울릉도)의 1도’의 1도가 독도라는 것은 관련 공식문서의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독도는 당시 일본의 독도명칭인 송도(松島, 마쓰시마)로 표기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05년 이전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명확히 인정했다. 태정관 지령과 기죽도 약도는 1987년에 발견되었다.

7)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이 문서는 앞서 ‘한국의 독도’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SCAPIN677호는 ‘일본주변지역 일부를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사실을 일본정부에 하달한 문서이다.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점령 통치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이 각서를 통하여 독도를 울릉도, 제주도과 함께 일본의 통치영역에서 분리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각서의 규정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일본을 점령통치하는 기간 동안 유효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직후 일본정부가 「일본영역참고도」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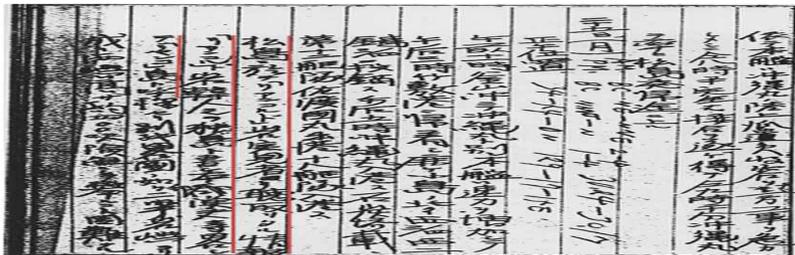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주장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먼저 일본의 독도무지선점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도가 고대로부터 한국의 고유영토였는데 일본이 20세기 초 러일전쟁을 전후로 독도가 무주지 임을 내세워 자국

영토로 몰래 편입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무주지선점을 두둔하는 학자들은 ‘당시 제국주의가 팽배해있던 국제정세로 보았을 때 독도무주지선점은 국제법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독도무주지선점 논리 이외에도 한국이 주장하는 우산도가 지금의 독도인가? 는 한일 간에 독도논쟁의 쟁점이기도 하다. 다음은 한일양국이 보는 독도영유권주장에 대해서 몇 가지 논쟁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다.

첫째, 한국의 ‘우산국은 울릉도를 말하며 우산도는 독도를 가리킨다’에 대해 일본의 주장은 상반된 입장이다. 둘째, 안용복의 공술에 관한 내용은, 한국의 경우 ‘울릉도와 독도 영유권을 재확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은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셋째, 역사적으로 독도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막부에 의한 ‘울릉도도해금지령(1696)이 울릉도 독도 영유권 재확인’주장에 대해 일본은 ‘도해금지 대상에 독도는 포함되지 않음’으로 맞서고 있다. 넷째, 근대시기에 나타난 일본의 공문서에서의 독도관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조선국교제시말내담서」울릉도 독도가 조선에 부속하게 된 경위보고서(1870) 해석에 대해 한국은 ‘일본정부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다는 입장에 대해 일본은, ‘울릉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독도는 제외됨’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섯째, 한국이 독도영유권주장과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게 사용하는 자료는 태정관발행문서의 ‘죽도외일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무관함을 인정’에 대해서 일본은 별다른 반박내용 없이 ‘인정한 것이 아님’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섯째,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 석도는 독도인가, ‘울릉도를 울도 로 개칭,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 하도록 함’에 대해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위한 10포인트’ 6-5~7번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부정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1900년의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를 울도 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한다는 것을 공포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가운데, 울릉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소도와 죽도·석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덧섬’이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방언으로 ‘석(石)을 ‘독’으로

도 발음하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만일 이 의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 칙령의 공포를 전후해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은 1904년 9월 일본군함 신고호(新高號)의 행동일지를 보더라도 간단히 부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독도'라는 명칭을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으나 일본이 독도강제편입시기인 1905년 2월 22일 보다는 수개월이전인 1905년 9월 25일 군함신고호행동일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함신고호 행동일지』상기 그림에서는 '마츠시마(송도) 즉 리앙쿠르트 이와(岩 바위)를 한국인들은 독도라고 부른다'로 기록되어있다. 이 자료가 비록 일본 문헌이라 할지라도 한국은 독도라는 명칭을 시마네현고시40호 시행 이전부터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1905년 독도편입 결정. 시마네현고시 유효성에 대해 일본은 당시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의 어업관련 기록을 근거로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는 내용으로 일괄하고 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강제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였다. 그러나 곧 강제어업이 가열 경쟁상태가 되자 시마네현 오키섬의 나카이는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게 독도의 영토 편입 및 10년간의 임대를 청원했다. 일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 일본 시마네대 명예교수는 생전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는 당시 외무성의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郎) 정무국장, 농상무성의 마키 보쿠신(牧朴眞) 수산국장, 해군성의 기모쓰케 가네유키(肝付兼行) 수로부장 등 3명이 중심 역할을 했다면서 당시 이들은 모두 독도가 한국의 땅

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나이토 교수에 따르면 이들 3명은 1904년 독도에서 강제 포획을 위해 한국 측에 대하원(貸下願, 독도이용청원)을 하려던 나카이의 '대하원' 신청을 독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으로 바꿔 일본정부에 접수토록 하는 등 독도 영토편입을 유도해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나카이의 이 같은 신청을 앞세워 1905년 1월28일 각의결정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강제 편입했다.”면서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독도편입을 부정했다.

여덟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연합국 측에서는 독도관련 영유권 명기에 있어서 1~5차까지 독도가 한국영토로 포함되었으나 6차 초안에서 잠시 일본영토로 포함되었을 뿐 이후에는 한일 어느 나라 영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근거로 독도를 자국영토로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아홉째,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이 독도와 관련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상대국의 제소에 의무적으로 응하는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에 대해 ICJ가입당시 수락하지 않았기에 응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ICJ에 제소하려는 이유는 일본이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과의 차별화를 부각 시려하는 것이다. 이는 일본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으로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며 일본은 1958년에 ICJ가입당시 강제관할권을 수락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1년 ICJ가입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이처럼 한일양국 간에는 독도영토주권 주장에 대한 내용이 상이하다. 그러나 독도의주인은 한국이며 더 나아가서는 영토주권 행사 역시 한국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한일 간에는 영토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매년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이 비록 허구일지

라도 우리는 독도에 대해 일본이 그릇된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Vol. 3 No. 1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경원

편집위원(가나다순)

김경원

김대종

배기형

이덕로

이희찬

발행처 | 세종연구원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132길 15 세종연구원

전화 | 02-499-5765

인쇄일 | 2019년 12월

발행일 | 2019년 12월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케이티에스씨



[주]코빅푸드



KTS KTSC

(주)KTSC(구.한국관광용품센터)는 1972년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무분별한 식자재의 개별 수입으로 인한 외화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모든 관광호텔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수입 식자재 유통 전문회사입니다.

KTSC가 직수입한 다양한 카테고리의 최고의 프리미엄 식자재를 온라인 쇼핑몰 ekts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의 호텔 및 외식업체 공급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 및 신선 채소를 비롯한 3,000여 종의 다양한 식자재



전국 유통망 구축, 신속한 배송
4,000여명 규모의 KTSC 물류센터와 본사, 전국 지사, 종합물류센터 연결



Total Food System
한 곳에서 구매하여 일괄 배송을 실시하는 One Stop Shopping



“철저한 위생관리, 안전한 제품생산,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더불어 국제적인 식품안전 기준인 HACCP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육가공 선도적 기업

(주)코빅푸드는 최첨단 생산설비, 선진의 육가공 기술, 체계적인 품질관리,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등을 통하여 한국의 축산물 수입, 생산, 유통시장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해 왔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하는 기업

식생활 문화의 발달로 인하여 안전한 식품 및 고품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코빅푸드는 한국의 축산물 공급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대형 유통업체, 패밀리 레스토랑, 호텔, 식자재 기업,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에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 하고 있습니다.

Sejong Hotel Seoul...

세종대왕의 높은 성덕과 정신을 실현한다는 창업의지에 따라 명명된 세종호텔은 한국 최초의 순수 민자 호텔로서 1966년 개관 이후 5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 객실

사계절 아름다운 남산과 명동의 다운타운을 전경으로 고품스런 비와 모던함이 공존하는 333개의 객실은 아늑한 공간과 최신식 시설로 안락하고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 객실 문의 : 02. 3705. 9115

다양한 메뉴와 최고수준 요리의 레스토랑

계절별 식재료를 사용한 테마별 뷔페와 라이브 키친을 통해 신선한 맛을 즐길 수 있는 한식 뷔페 레스토랑(은하수), 마늘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건강식 이태리인 요리와 커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라운지&다이닝 <베르디>에서 맛의 진미를 느껴실 수 있습니다.

■ 레스토랑 문의 : 02. 3705. 9141 (은하수) / 02. 3705. 9146 (베르디)

53년간의 호텔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컨세션

반세기 동안 호텔 및 식음료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백범기념관, 세종문화회관,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은행, 한전아트센터, 금강원 등 웨딩 케이터링을 통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컨벤션 사업, 웨딩 케이터링, 단체 급식 등 식음료 운영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최고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컨세션 문의 : 02. 3705. 9062

(주)세종에스엠에스



주세종에스엠에스는 1990년 5월 설립한 이후 27년간 수많은 명문 골프장의 식음료 사업을 위탁 운영하면서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과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골프장에게는 최고의 매출로대로 수익을 제공하고 골프장 이용 고객에게는 최상의 음식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고객인 직원들에게는 열렬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HAND MADE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질하여 주문 즉시 조리하여 제공



MENU 개발

다양한 상황과 연령대의 모든 고객의 만족을 위해 계절별/지역별 특색있는 메뉴 연구개발



상호보완상생의 경영

이윤추구가 아닌 고객사의 위탁사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동반자의 관계를 지향

UNINOMIC REVIEW

VOL.3 No. 1

FOUR POWERS AROUND KOREA AND KOREA'S SURVIVAL STRATEGY

**Korea-Japan Cooperation for the
Competitiveness of Advanced
Manufacturing**
Ji Pyeong LEE

**Geopolitical present in East Asia and
Strategic moves by Korea, China and Japan**
Seung Won SEO

**Strategies for Co-Prosperty of Korea and
Japan**
Boo Hyung LEE

Korea-China, Between US and China
Jin Hee LIM

**Korea's Economic Dependency with China
and Prospects**
Eui Hyun CHOI

**The Korean Peninsula War and Crisis,
Korea's Road**
Jae Bong LEE

**LNG Strategy in Japan and Korea's
Collaboration Strategy**
Seok Sang YOON

**Diplomatic Strategies for the Coexistence
of Korea and Japan**
Young Jun PARK

Dok-Do(Island) Story of Korea and Japan
Jin Oh KWAK



ISSN 2635-5833